



수출에서 기술로: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신성장 전략

로버트 앳킨슨, 김세진 | 2025년 5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의 기조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따라 한국은 기존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재편해야 한다. 핵심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의 대형화·효율화다.

주요 내용

-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제조업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따라 위기를 맞았다. 한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 국가 성장 펀더멘털을 전략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현재 한국의 성장 모델은 기업 규모, 부문 간의 극명한 생산성 격차로 특징지어지는 이중 경제 구조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 대기업의 성장세를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한국 경제의 전체 성장세를 낮추는 구조다.
- 한국의 차기 성장 과제는 저생산성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대형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 대기업 증가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넘어, 고임금·고안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고용 부진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인구·경제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을 생존에서 스케일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성장부’ 신설, 중소기업에 한정한 지원 기조 폐지,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은 서비스업 등 저생산 부문을 위한 기술 혁신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재취업 안전망, 모듈형 고등교육,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한미 간 기술 인재 교류 확대 등 노동 시장 개혁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주요 내용	1
서론	2
한국의 생산성 격차 진단: 이중 경제	5
한국 경제 모델이 멈춰선 이유: 구조적 및 정책적 제약	17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27
결론: 생산성 중심 성장 모델로의 전환	32
각주	34

서론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서 산업 기술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전략은 전후 빈곤을 겪던 한국을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챔피언을 배출한 산업 강국으로 이끌었다. 이는 규모, 자본집약도, 수출을 기반으로 한 성공 모델이었으며, 오랜 시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 역학은 변하고 있다. 트럼프 2 기 행정부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협상의 수단이 아닌 정책의 기본값으로 삼는 전략적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했으며, 한때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은 점점 더 자립적으로 지배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분절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고기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러한 변화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더 많은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구학적 변화도 이 성장모델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모델은 여전히 대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비제조 부문은 구조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R&D 투자 집약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시스템은 소수의 자본집약적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업, 중소기업, 소비자 대상 산업은 이러한 혁신 파이프라인과 단절되어 있으며, 그 결과 상위는 세계 수준, 하위는 정체 상태인 ‘이중속도(two-speed) 경제’가 형성됐다.

데이터는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 중소기업은 전체 등록 기업의 99.9%, 고용의 81%를 차지하지만,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 이하, 서비스업에서는 40%에도 미치지 못한다.¹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제조업 생산성은 19%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6% 증가에 그쳤다. 이는 현재 서비스업이 한국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²

- 이로 인해 고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고용의 13.9%에 불과하다. 미국(57.6%)의 약 ¼ 수준이며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³ 이러한 일자리 부족은 조기 은퇴를 가속화하고, 고령 및 청년 노동자를 저생산성 자영업으로 몰아넣으며, 고학력 청년 인재를 저임금 중소기업 일자리로 낭비시키고, 결국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연이 아닌, 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기업의 성장보다 생존을 우선시해왔다. 1,600 개가 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 규제 보호 조치는 기업 분절화를 조장하고, 통합, 자동화, 혁신 확산을 저해해왔다. 규제 체계 역시 ‘창조적 파괴’보다는 소규모 기업 보호와 안정 유지에 편향되어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을 유도하기보다는 저생산성 상태를 고착화 했다.

동시에 한국의 혁신 전략은 여전히 자본집약적이며 수출 지향적인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전체 R&D 의 70% 이상이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며, 의료, 물류, 소매, 농업 등 소비자 대상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은 미미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도입률은 여전히 낮으며, ERP,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의 도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인구학적 역풍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세계 최저 출산율, 대학 졸업자와 노동시장 간의 구조적 미스매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질 은퇴 연령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퇴직자와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다. 대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파편화된 수출 중심 모델에서 혁신 확산, 중소기업 스케일업, 부문 전반의 디지털 전환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다음 장이 직면한 과제다.

한국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은 퇴직자와 대졸자를 배출하고 있다. 대기업 내 양질의 일자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길: 국가 생산성 재설정

한국은 더 이상 낡은 성장 전략으로 새로운 경제민족주의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수출 주도, 재벌 중심, 생존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은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분절된 성장에서 전 경제권 혁신 확산으로, 기업 보존에서 성과 중심 규모화로, 단순한 학력 축적에서 고품질 고용으로 즉, 생산성 중심의 경제 리셋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전환을 위한 차세대 생산성 전략을 다음 네 가지 핵심 축으로 제안한다.

- 생존 중심의 보호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을 규모 확장·생산성·혁신에 보상하는 성장 지향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을 소규모, 비효율적 상태로 묶어두는 제도적 편향을 제거하고, 성장 유인을 제공하는 규모 중립(size-neutral)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기업의 분산이나 영세성을 조장하는 기준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유도하는 규모 중립적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2. 중소기업 지원은 생산성 향상 및 규모 확대와 같은 정량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비효율을 방지하는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 도입 여부를 연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혁신을 수출 엘리트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한국의 다음 생산성 도약은 반도체 공장만이 아니라 물류, 건설, 농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AI, 클라우드, 자동화를 접목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기술보조금과 라스트마일 전달 체계를 포함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경직된 노동시장을 이동성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견·대기업의 저변을 확대해 고임금 일자리를 늘리고, 직무 전환·재훈련·재진입이 가능한 생애주기형 노동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연한 노동 기준, 재취업 안전망, 모듈형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시스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동반성장위원회(KCCP) 및 생계형 업종 지정 폐지
-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명시적·묵시적 의무를 제거하는 새로운 현장 제정
- 공정위의 플랫폼경쟁촉진법(PCPA) 및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PAB) 철회
- 중소벤처기업부를 ‘기업성장부’로 재편
- 규모에 따른 조세 왜곡 해소
-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생산성 향상, 규모 확장, 기술 도입 여부 중심으로 재편
- 중소기업 졸업 촉진 기금 출시
-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및 재배치를 위한 지금 조성
- 한국 과학기술 기관은 산업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뒤처진 분야의 생산성 향상
- 저생산 부문에서 기술 도입 가속화
-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ERP, AI 또는 로봇 공학 등 기술을 도입하는 모든 기업에 기술 세액 공제 확대
- 생산성 중심의 근로 성과 지표 개발
- 혁신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현대화
- 실시간 산업별 생산성과 기술 확산을 측정하는 ‘국가 생산성 대시보드’ 구축
- 한국의 허가 기반 규제 시스템(포지티브)을 기본적으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확대
- '폐업 후 재취업' 안전망 설계
-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 프레임워크 설계
-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
- 글로벌 인재 이동 패키지 개발

한국 경제의 다음 챕터는 더 이상 항만에서 쓰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다음 경제 장은 항만 터미널이 아닌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혁신이 생존인 시대에 한국의 성장 모델을 재설정할 수 있는 구조적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생산성 격차 진단: 이중 경제

수십 년간 대규모 산업 재벌이 주도한 급속한 성장 이후, 한국은 주요 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선도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더 심오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다. 바로 '이중 경제'의 등장이다. 대형 수출 중심 제조업체들이 이룬 성과가 둔화되고, 이러한 성장의 혜택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전반에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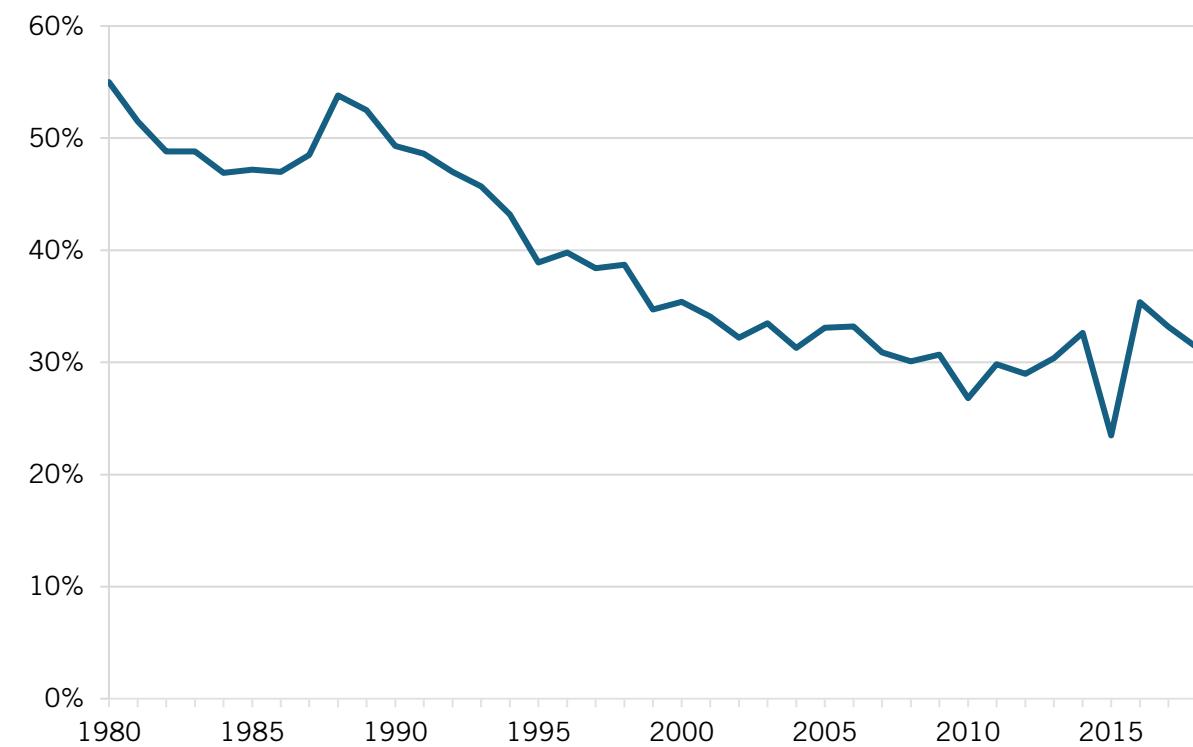
트럼프 2.0 시대에도 장기적 성장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현재 자국 경제를 제약하고 있는 내부 불균형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격차의 네 가지 주요 측면, 즉, 기업 규모 간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분리, 혁신 역량의 미스매치, 노동시장 제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대기업 대 중소기업: 규모, 구조, 생존

한국 경제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 등록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지나치게 많으며, 이를 대부분은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⁴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고용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고용 집중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 2020년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에 따르면, 한국 전체 근로자의 65.5%가 직원 수 5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⁵

그러나 구조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은 만성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대기업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figure 1).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출 강자가 존재하는 한편, 낮은 생산성의 기업들이 긴 꼬리를 이루는 '이중 구조(dual economy)'를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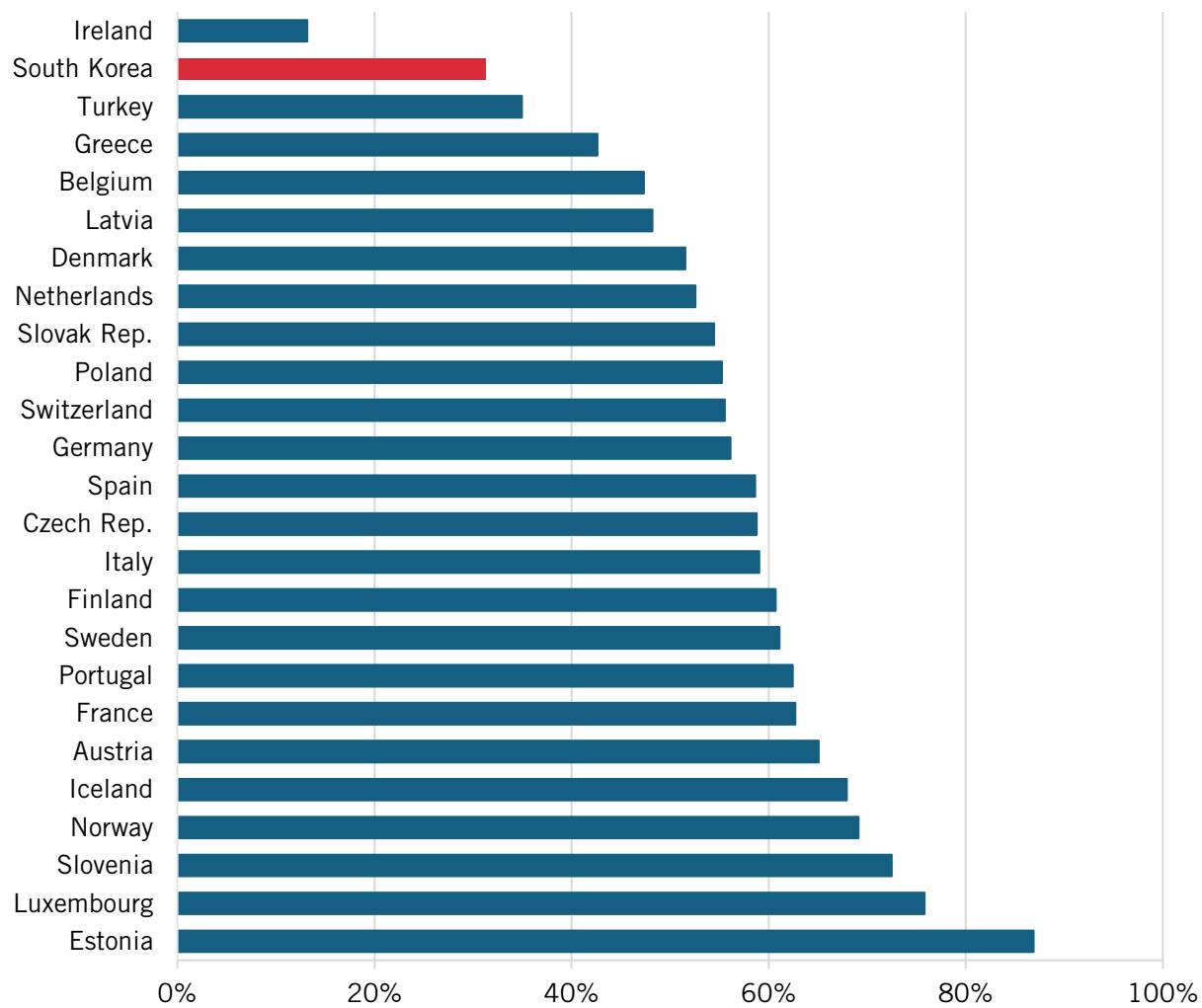
그림 1: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자 1 인당 부가가치 비율⁶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고용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에 고용이 점점 더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 분의 1 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약 50%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은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능가하고 있으며, 양자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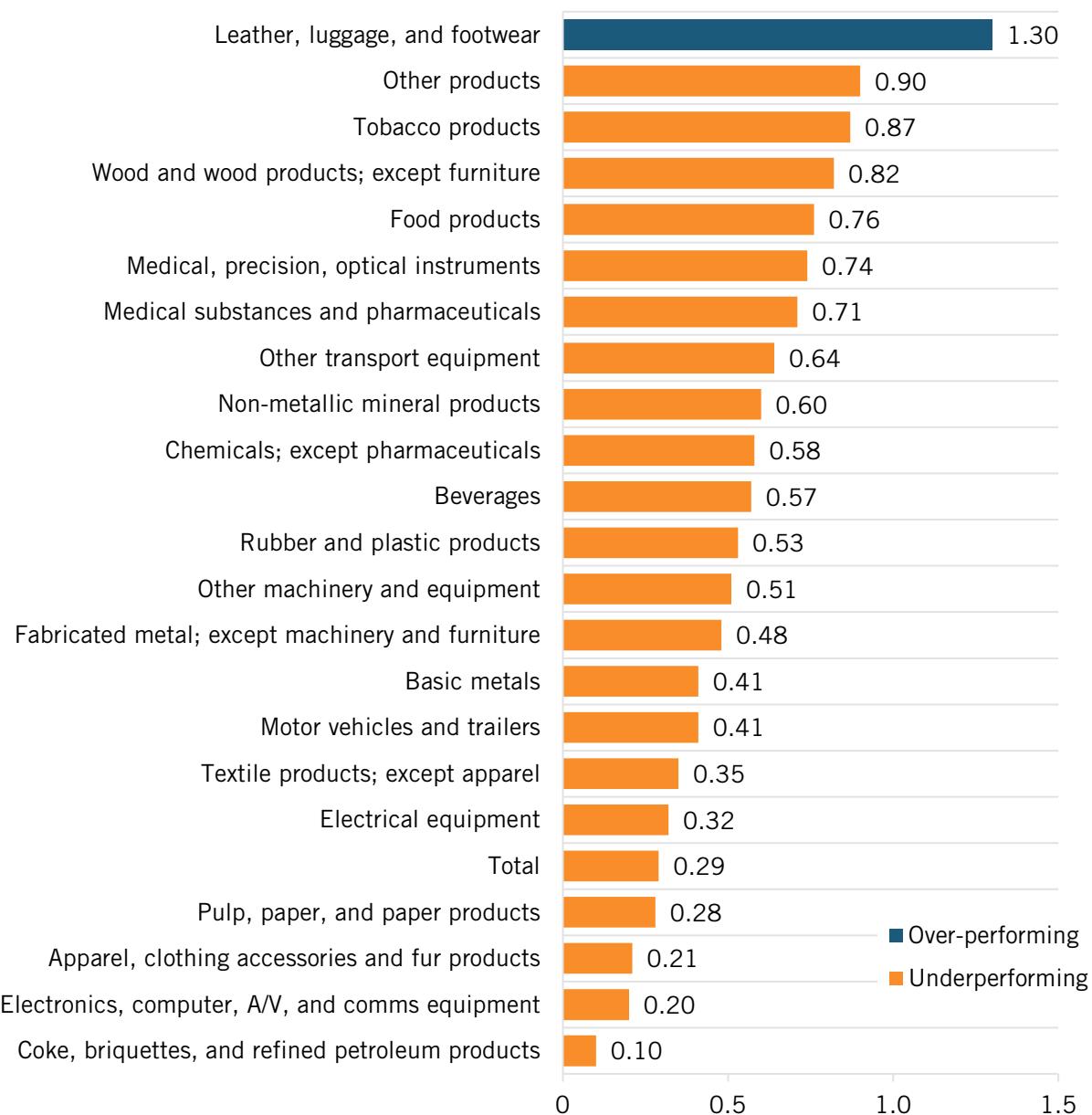
그림 2: 2020년 OECD 국가의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비율(대기업 대비)



한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50%에 미치지 못하며, 산업별로는 그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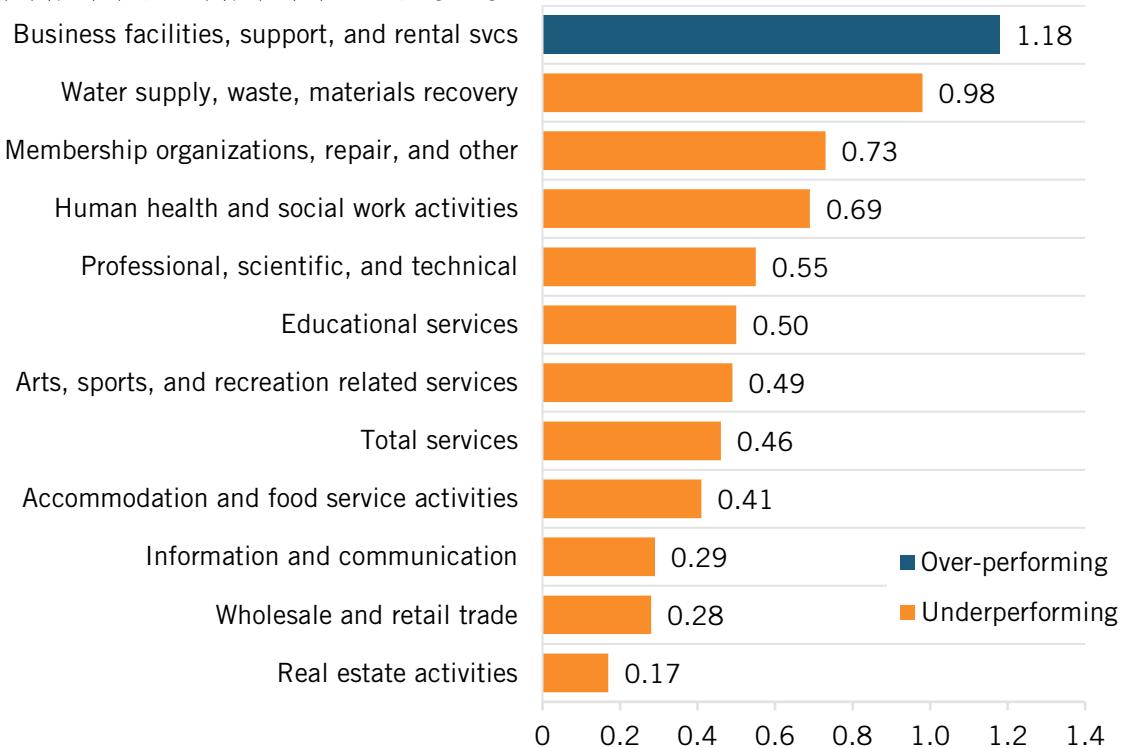
특히 한국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인 전자, 화학, 기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figure 3에서는 해당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거나 동일한 경우 1 이상의 값을 나타낸다. 1 미만의 값은 중소기업이 해당 산업에서 대기업보다 생산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하위 부문에서 제조업 전체보다도 생산성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제조업 노동 생산성⁷



서비스(figure 4) 분야에서 생산성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서비스 기업의 생산성은 21% 증가한 반면, 동일 업종 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3% 감소하였다.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생산성 격차는 특히 부동산, 숙박, 소매업 등 고용 비중은 높지만 혁신 수준은 낮은 업종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 디지털 도입, 그리고 투자 역량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림 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서비스 노동 생산성⁸



생산성 격차는 부동산, 숙박, 소매업 등 고용 비중은 높으나 혁신 수준은 낮은 업종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규모, 디지털 도입, 투자 역량 등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제조업 대 서비스업: 심화되는 격차

한국의 세계적 경제 위상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성공에 기반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은 오랫동안 한국 수출 경쟁력을 대표해온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별 강점은 근본적인 불균형을 가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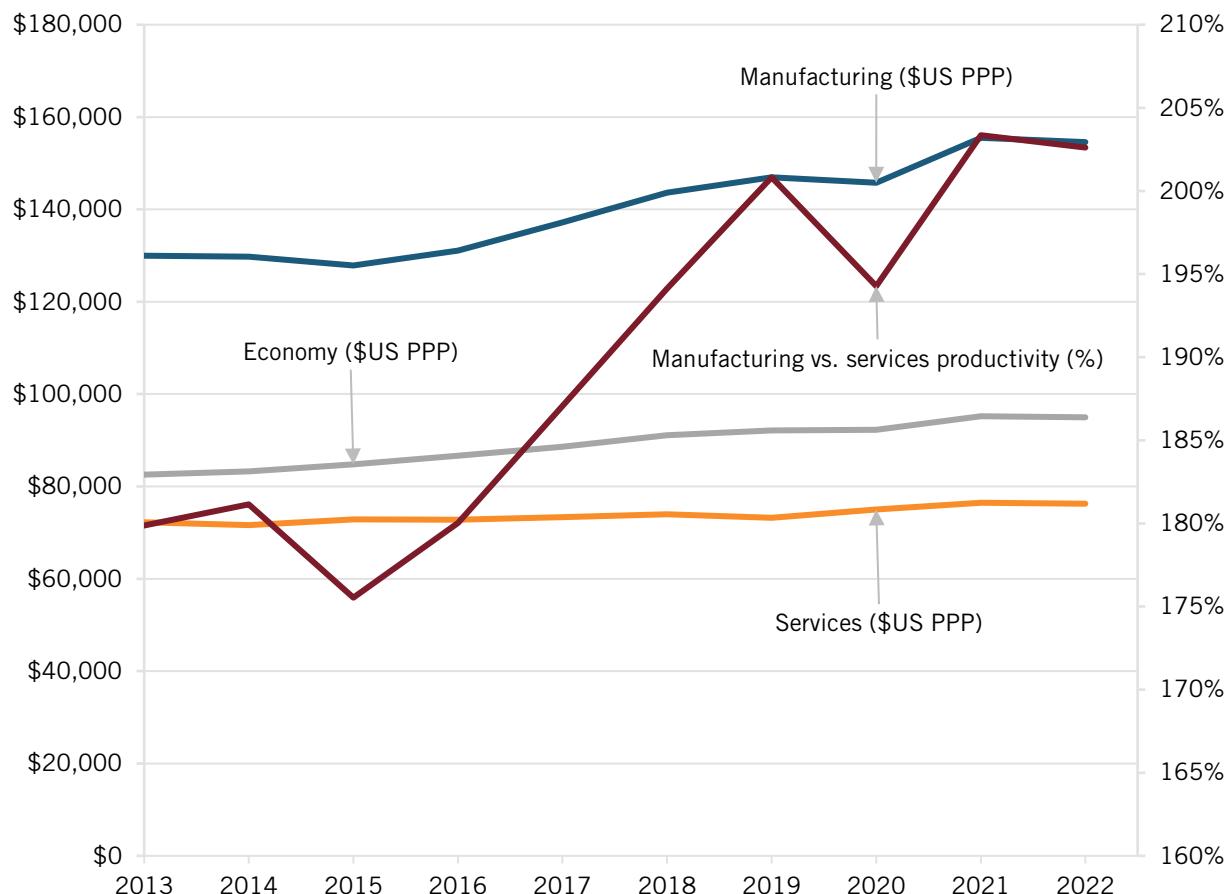
제조업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지만, 2023년 총 부가가치의 62.3%와 고용의 71.2%를 차지하는 한국의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취약 부문으로 남아 있다.⁹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동안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미 상당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과거와 비교할 때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다소 낮은 편이나, 서비스업의 증가율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서비스업에 비해 꾸준히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figure 5). 이런 차이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2022년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 구매력 평가(PPP) 기준 근로자 1인당 \$154,555에 달했으며, 이는 서비스 부문의 근로자 1인당 \$76,280 PPP와 비교된다. 다시 말해, 제조업 종사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2배를 넘으며, 생산성 격차는 103%에

달한다.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저생산성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 있어 구조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5: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근로자 1 인당 생산성(\$US PPP 기준)¹⁰



한국 제조업 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을 세 배 이상 앞질러 왔다. 이런 차이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생산성 수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조업 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비율은 200%를 초과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이 격차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figure 6). 2013년과 2023년 사이에 여러 기초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생산성 감소가 나타났다. 공익사업은 -41%, 건설은 -31%, 기술 서비스는 -21%, 폐기물 관리는 -19%, 부동산은 -17%, 정보 통신은 -15% 감소하였다. 이처럼 생산성의 정체 또는 하락 추세는 사회 서비스 및 소비자 서비스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데이터는 이러한 양상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의 농업, 임업, 어업 생산성(figure 7)은 주요 OECD 국가 중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산업별 생산성 변화, 2013년–2023년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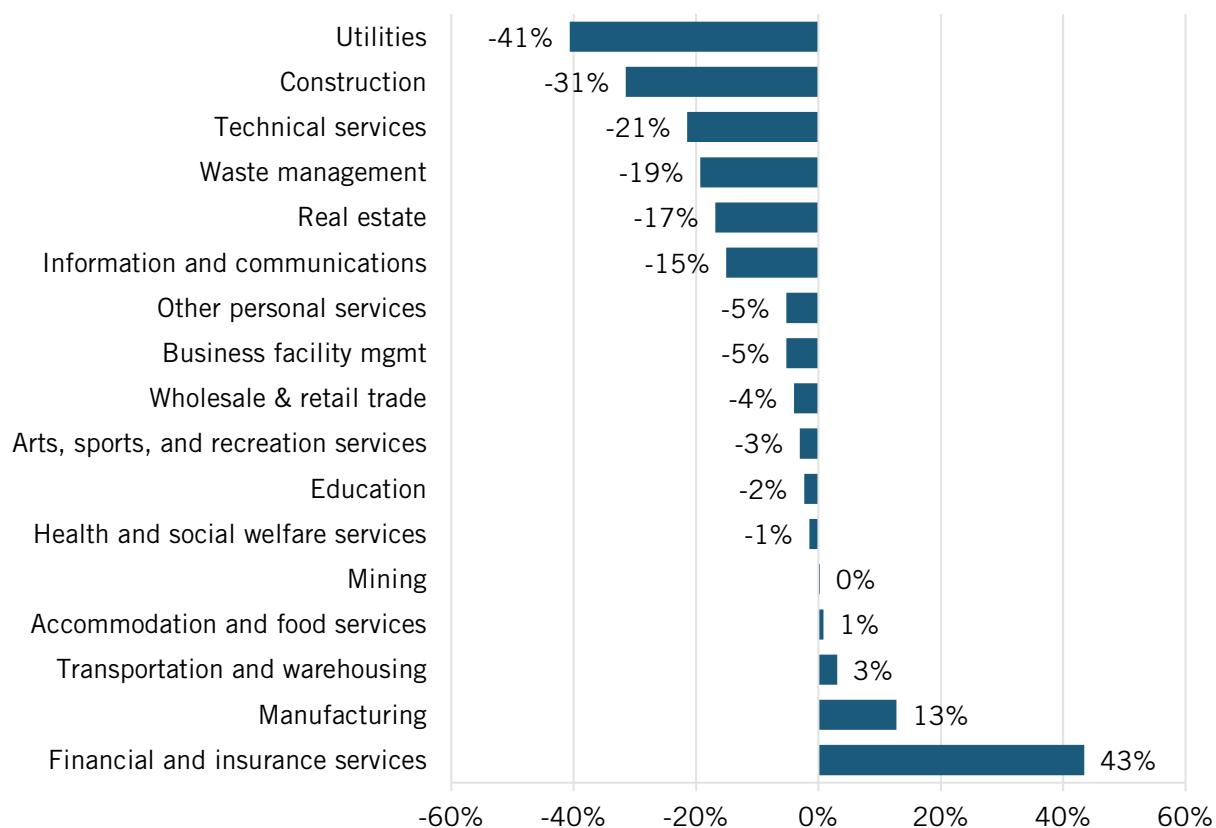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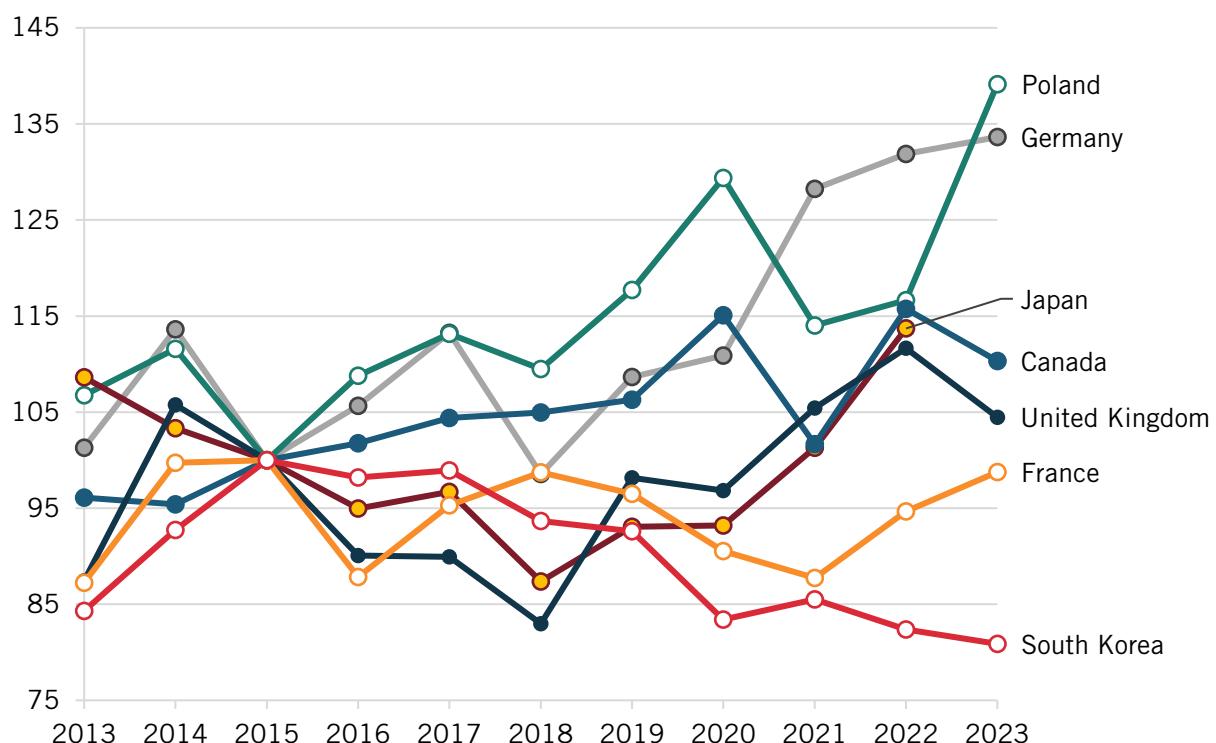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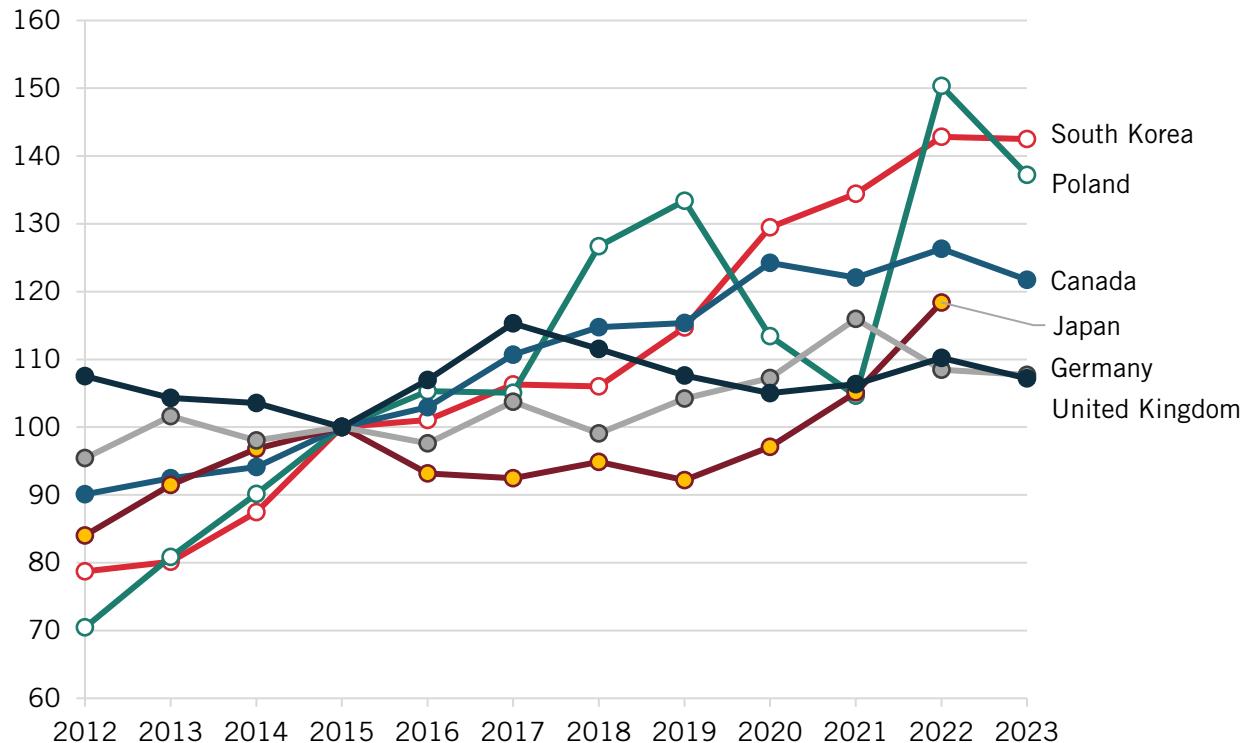


그림 7: 농림어업 생산성(1인당 총부가가치, 지수, 2015년 = 100)¹²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OECD 중위권 수준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figure 8). 이러한 격차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나타나는 보다 광범위한 기술 격차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일수록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과 기업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그림 8: 금융 및 보험 생산성(1 인당 총 부가가치, 2015년 = 100)¹³



주목할 점은,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농업, 건설, 부동산 등 노동집약적이면서도 인프라와 주거에 필수적인 분야라는 점이다. 이 부문의 침체는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만성적인 투자 부족, 자동화 도입의 제한, 그리고 산업 내 기업의 지속적인 분산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ICT 관련 서비스 생산성의 감소(-15%)는 한국의 광대역 보급률과 5G 인프라에 대한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결과이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적이며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계층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채택이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¹⁴

한편, 고용 비중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타 산업들 역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설 관리 -5%, 기타 개인 서비스 -5%, 도소매업 -4%, 교육 -2%, 보건 및 사회 복지 -1% 등이다.

이러한 부문은 종종 공공적이거나 반비공식적이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한적이고, 디지털 도구의 활용이 제한적이며,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추진 여지도 낮은 편이다.

그림 9: 서비스 노동 생산성(KRW 백만)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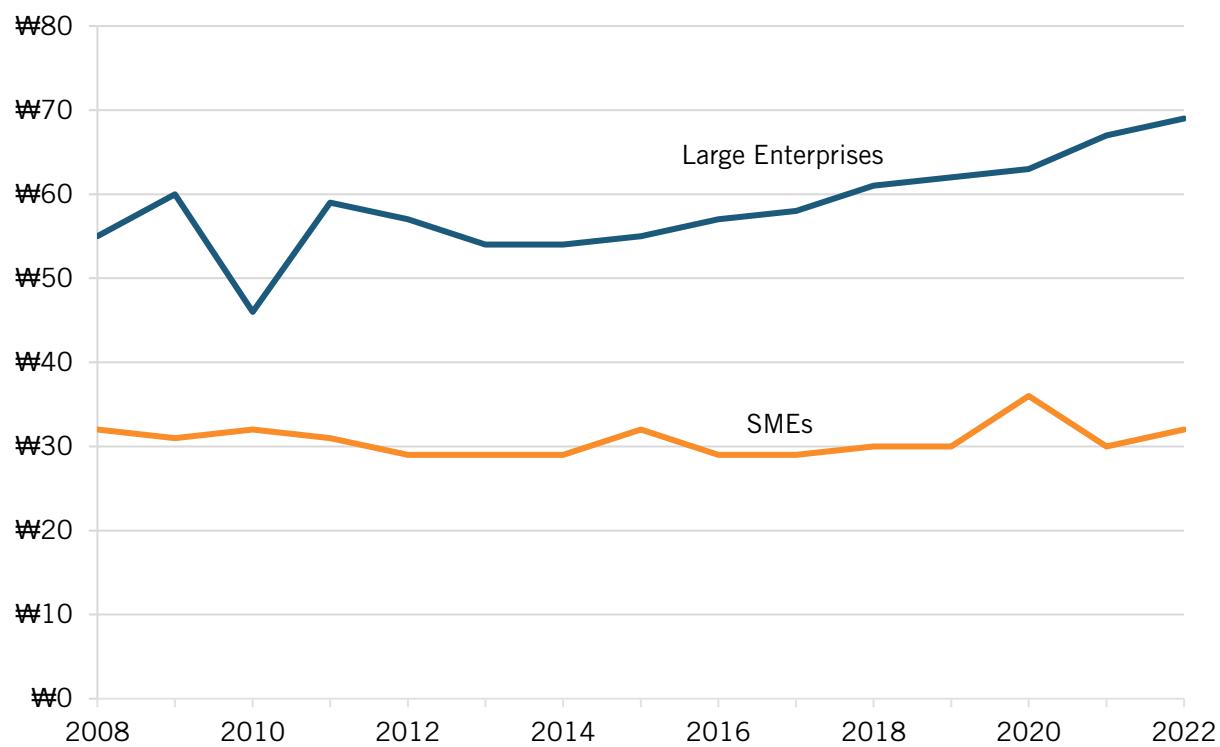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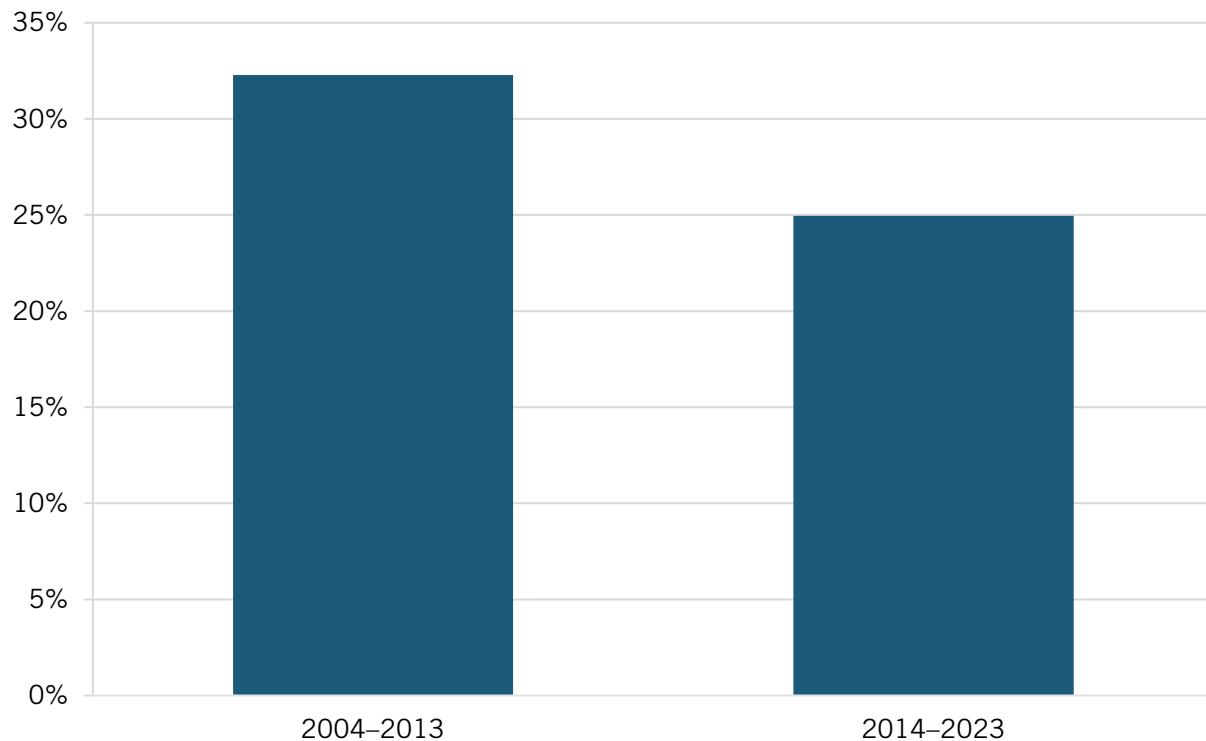


그림 10: 한국 서비스 생산성 성장¹⁶



한국의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국가 경제 모델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은 꾸준한 생산성 증가(+13%)를 보였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하드웨어, 자동차, 첨단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본 집약적이며 수출 주도형 산업 생산에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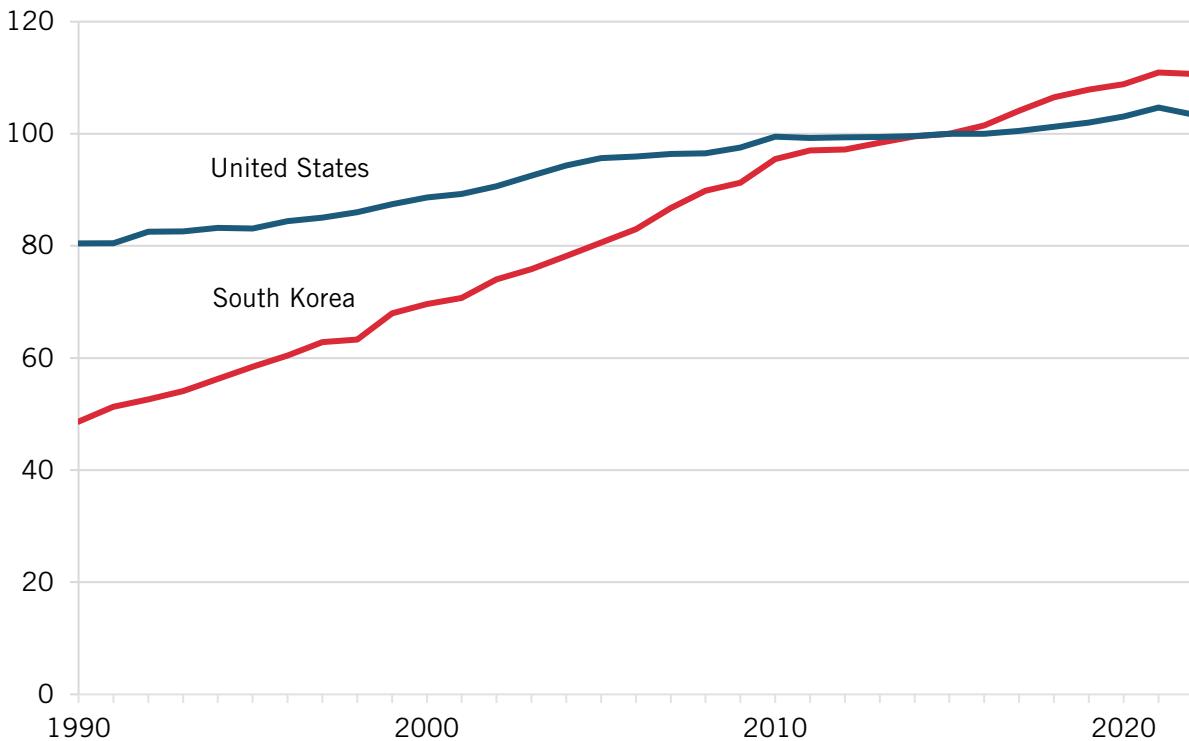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전체 취업자(2,859만 명) 중 15.39%로, 전년의 15.89%보다 하락하였다.¹⁷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당시 제조업 고용 비중은 17.23%였다. 이러한 감소는 한국 노동시장이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 자동화 중심의 생산성 향상으로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더 강한 혁신 확산을 통해 단위 투입당 더 많은 산출을 달성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없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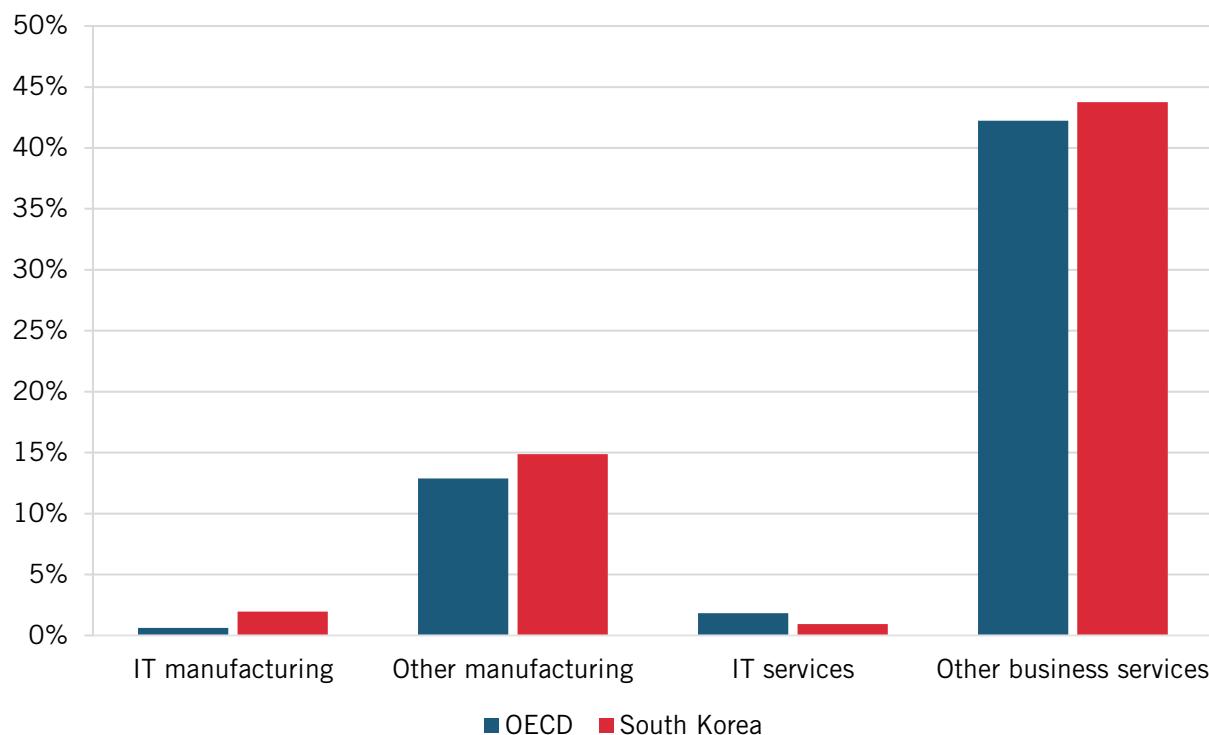
그림 11: 다요인 생산성 지수 (2015년 = 100)¹⁸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고, 생산성은 너무 작다

문제는 단순히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업이 현재 국민 대다수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서비스 부문은 성과 면에서 뒤쳐질 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는 경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부문이다.

그림 12: 산업별 고용 점유율¹⁹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높지만,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산성이 낮은 도매 및 소매업, 운송, 숙박, 음식 서비스 등 저생산성 부문은 한국 전체 고용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25%보다 높은 수치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도 이러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발생한다.²⁰ 2017년 기준,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56%가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다른 OECD 국가에서 관찰되는 경향과 유사하다.²¹

제조업과 같은 생산성이 높은 부문 내에서도, 중소기업은 기업과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생산성은 대규모 제조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전반에서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한국에서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크다.²² 이러한 격차는 한국이 중소기업 부문, 특히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산업에서 생산성 증대를 배양해야만 하는 과제를 강조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은 한국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노동 시장 성과와 사회적 결과

한국이 기업 및 산업 수준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지배와 대기업 부문의 제한적인 규모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심각한 불균형적 산업 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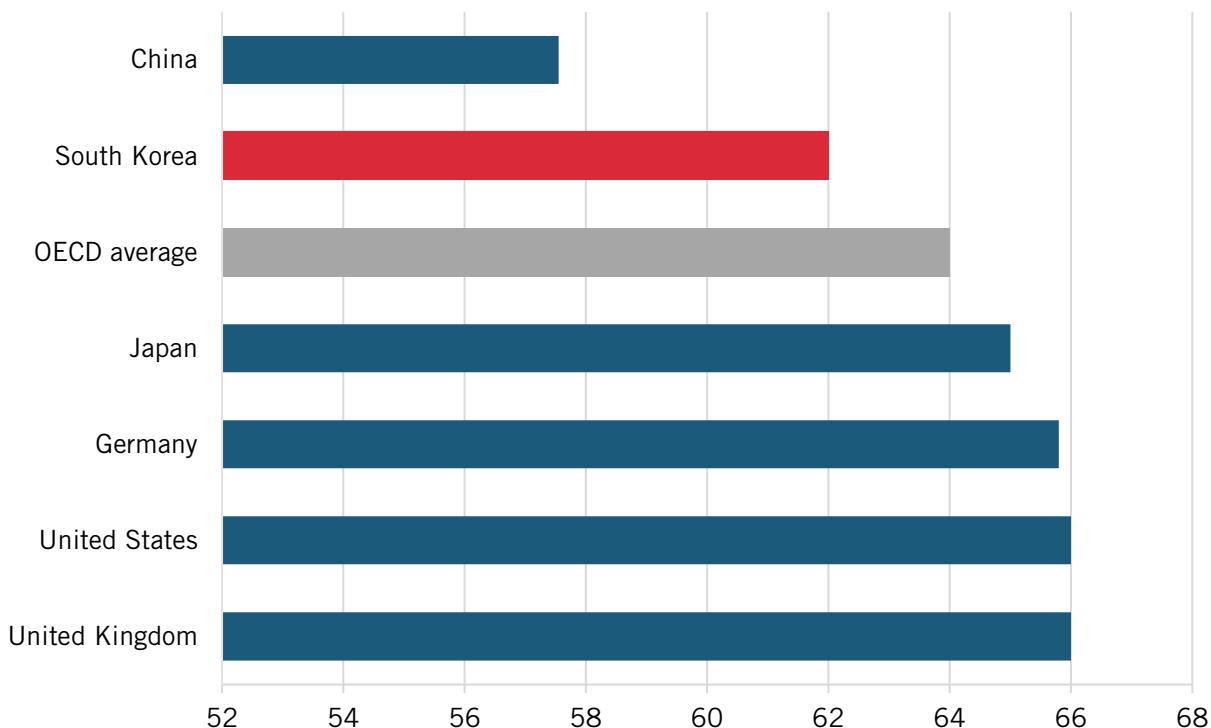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13.9%에 불과하며, 이는 OECD 3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3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비교하면, 미국은 57.6%, 독일은 41.1%, 일본은 40.9%로 대기업 고용 비중이 훨씬 높다.²³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조기 은퇴가 가속화되고, 노령 근로자는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으로 전락하며, 고학력 청년의 잠재력이 질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낭비되고,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데 기여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의 고용이 우수한 노동 조건, 즉 더 높은 임금, 더 큰 직업 안정성, 더 폭넓은 복리후생 접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⁴ 2023년, 소규모 기업(직원 5~9명)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대기업(직원 300명 이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54%에 불과했다.²⁵ 중견 기업(직원 100~299명)의 근로자 조차도 대기업 대비 71% 수준의 임금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및 일·생활 균형 관련 복지 혜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격차가 존재한다. 2023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직원의 95.1%가 출산휴가를 전면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중견기업에서 88.4%, 중소기업에서는 71.9%에 그쳤다.²⁶

그림 13: 평균 은퇴 연령²⁷



이러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조기 은퇴를 가속화하고, 고령 근로자를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으로 내몰며, 고학력 청년 인재를 낮은 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에 끌어들여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역대 최저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실질적 은퇴 연령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에 있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다(figure 13).

동시에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가족 친화적인 고용이 부족한 데 일부 기인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출산 적령기의 젊은 근로자들에게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 교육 이수율을 자랑하지만, OECD 국가 중 교육 수준과 일자리 질 간의 연관성이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이다. 25~34 세 성인의 약 70%가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²⁸ OECD에 따르면 이들 중 31%가 현재 직무에 과잉학력 상태(overqualified)로 종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19년 기준, 대학 학위자가 학력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율(underemployment rate)은 49%를 초과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23%)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이다.²⁹ 대한민국은 또한 학문 분야와 직업 배치 사이에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로, 이는 학문적 전문화가 노동 시장에서의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기능 장애를 반영한다. 노동시장에서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기술이 일치하지 않으며, 고등 교육에 대한 수년간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낭비하는 셈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3 중 고립"에 빠져있다: 고용을 지배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디지털 전환 수준도 미흡하다. 이러한 "이중(two-speed)" 경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이다.

한국 경제 모델이 멈춰선 이유: 구조적 및 정책적 제약

한국이 산업 강국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규모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전략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동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경험은 정책 결정자들이 구조적 불균형을 간과하거나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제도적 선택의 산물이다. 한국의 현재 정책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이중 경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전환과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 및 금융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섹션에서는 두 가지 핵심 구조적 장애 요인을 분석한다. (1) 국가를 저생산성 함정에 빠뜨리는 과도하고 단편화된 중소기업 생태계 (2) 광범위한 혁신을 촉진하지 못하는 국가적 혁신 전략.

소규모 비효율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정책 아키텍처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1%를 차지한다. 많은 사람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만, 실상은 건강한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왜곡된 생태계의 산물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 123 조 3 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은 '육성'보다는 '보호'에 치우쳐 왔으며, 그 결과 생산성 향상이나 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영세 기업들이 시장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은 채 장기간 생존하도록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보다는, 비효율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가 성장하거나 퇴출되지 않고

무기한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기업 대출은 실적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큰 특혜를 주는 한편, 공적 대출 보증은 이러한 기업을 시장 규율에서 더욱 보호한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된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수익성 개선에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³¹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의 **81%**를 차지한다. 많은 사람이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만, 실상은 건강한 시장의 결과물이 아니며, 구조적으로 왜곡된 생태계의 산물이다.

지원은 종종 부처 간 중복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다.

SME의 구조적 취약성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오랫동안 기업의 ‘성장’보다는 ‘생존’을 중심에 두어 왔다. 다수의 보호 정책과 보조금이 기업의 성과 제고보다는 존속 유지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소규모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창조적 파괴’를 수용·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1,6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³²
- 한국은 의무적 중소기업 대출 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증가분의 최소 45%를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60%, 특정 금융기관은 35% 이상을 할당해야 함.³³
- 신용 보증과 세금 혜택은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드물

그림 14: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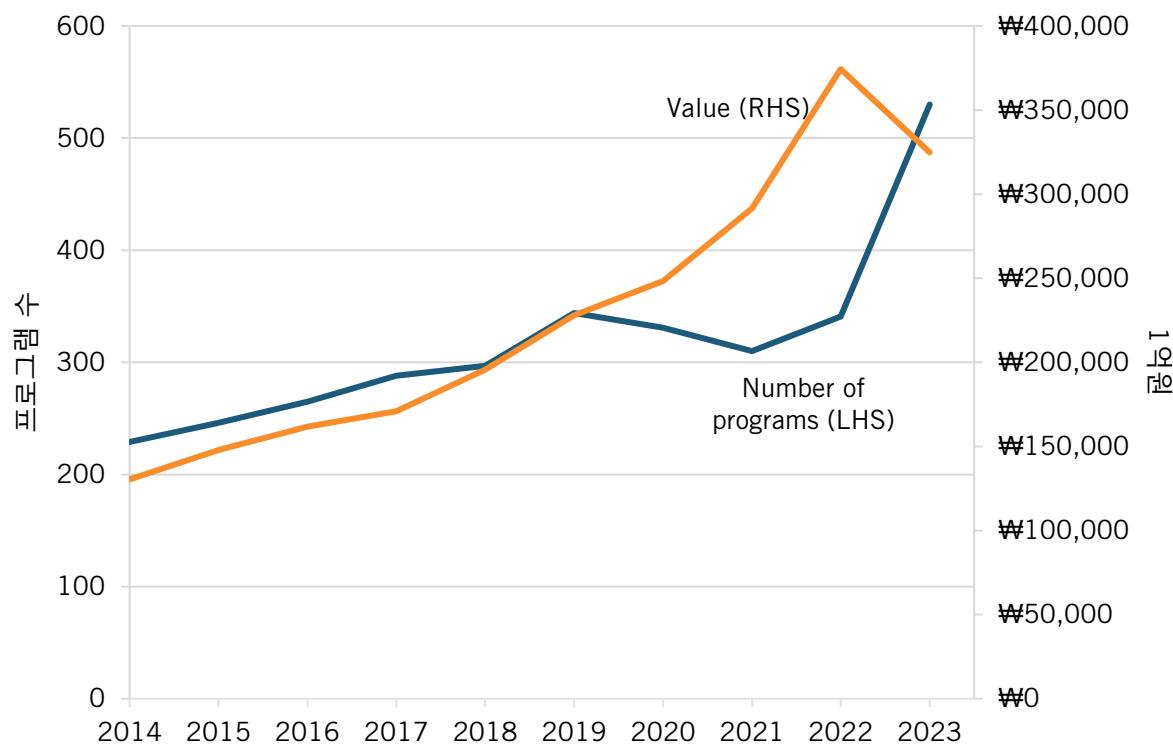


그림 1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 정부 프로그램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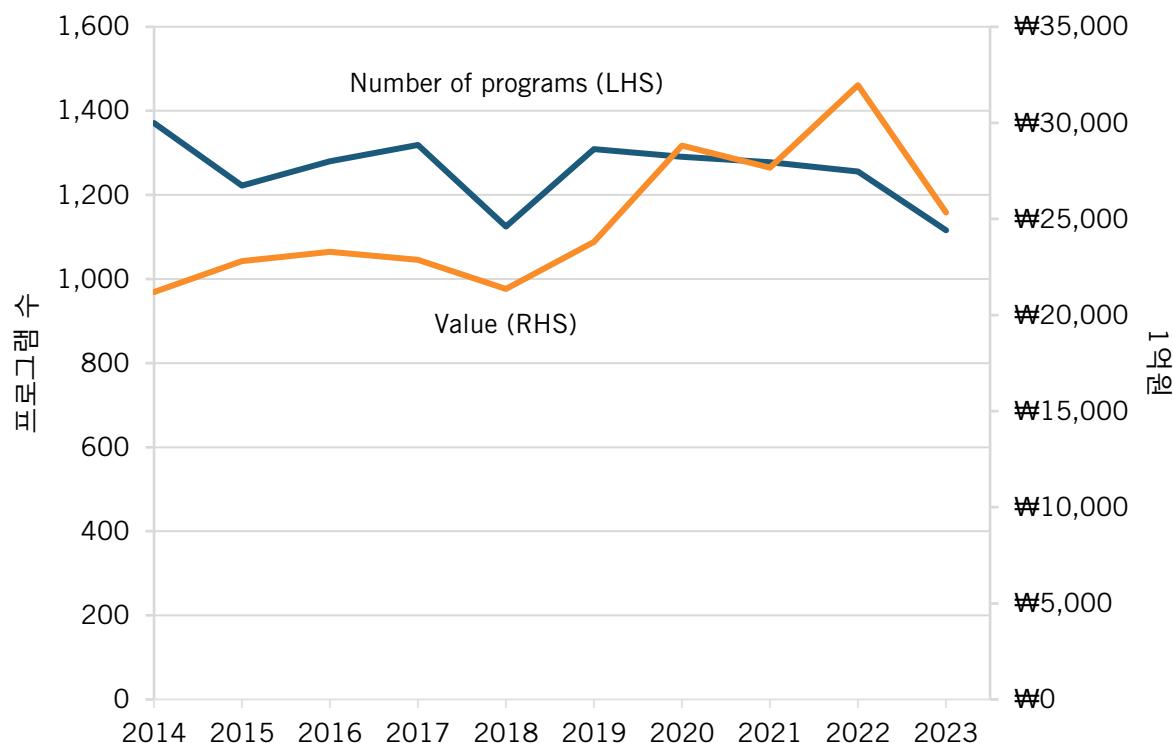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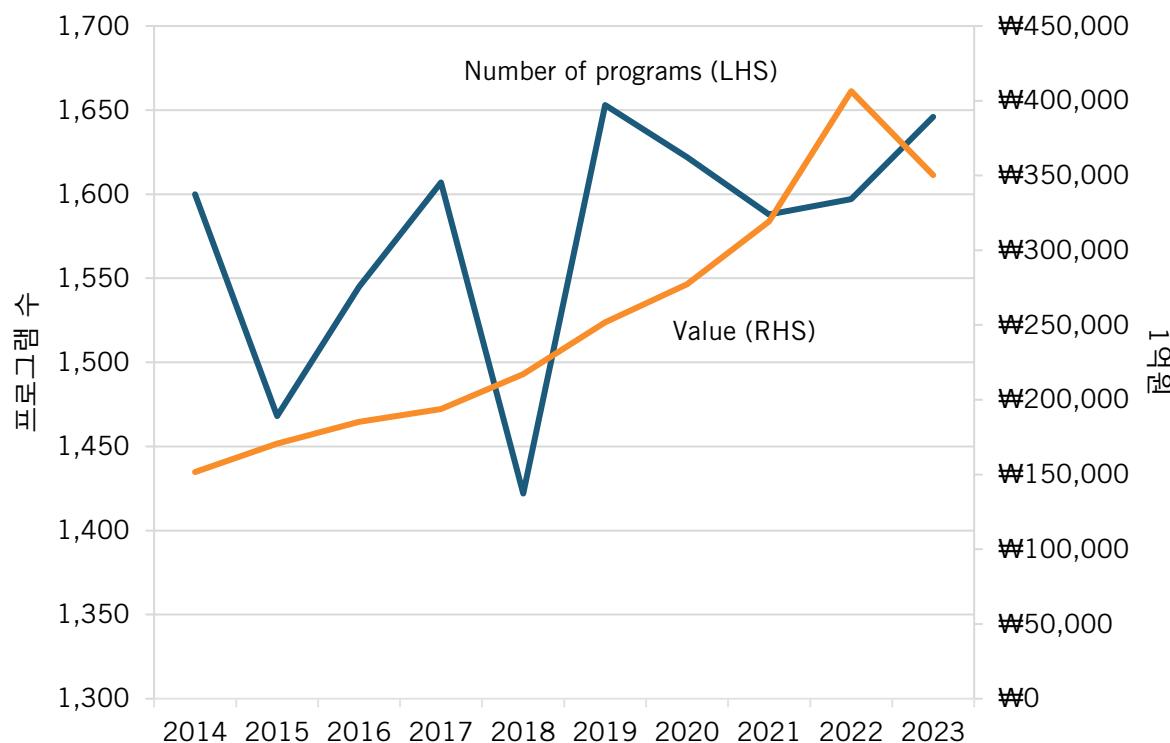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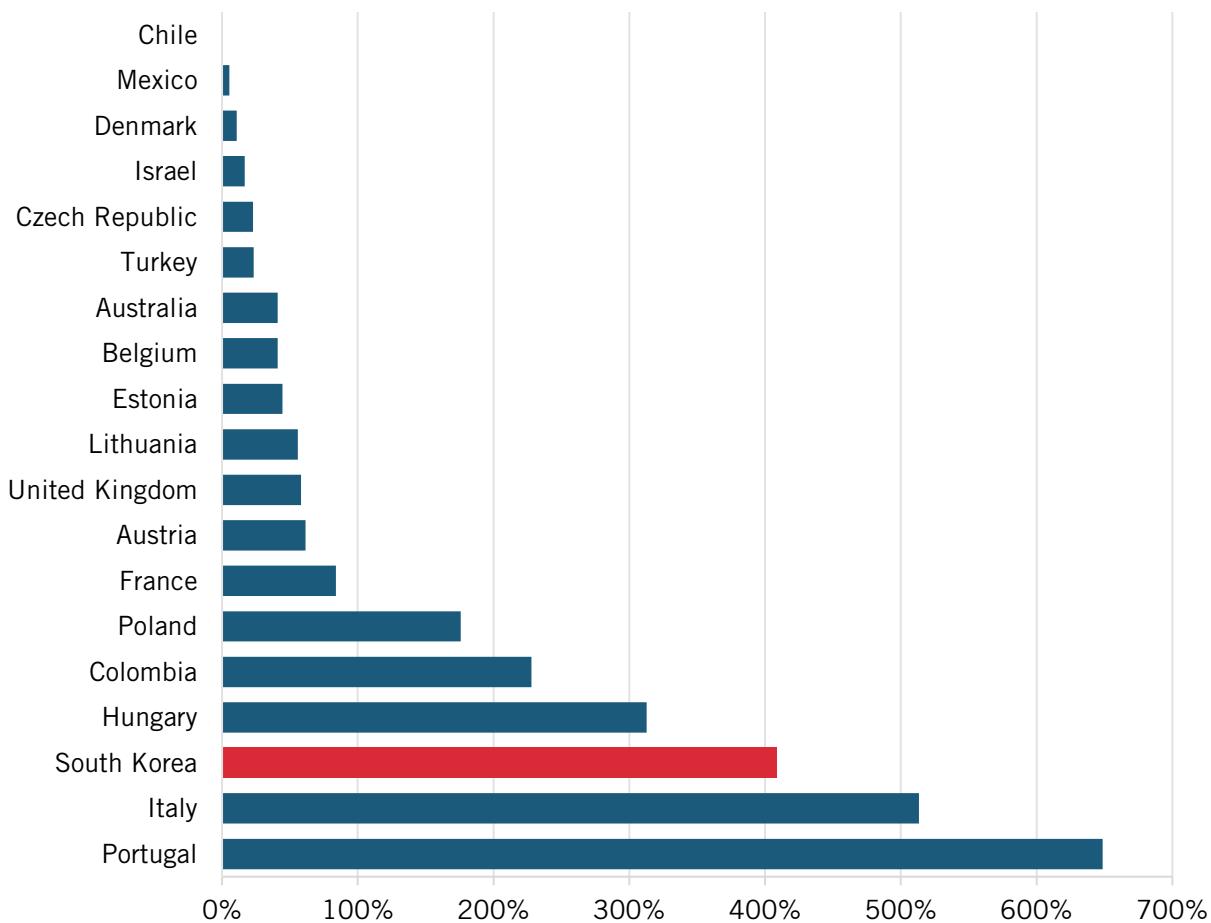


그림 16: 중소기업 지원 전체 프로그램 ³⁶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530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1,116개에 이르렀고, 최근 몇 년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총지출은 3,500억 원을 초과하였다.

그림 17: 중소기업 대상 정부 보증 대출, 2021년(GDP 대비 비율)³⁷



대출 보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쟁력이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살아남고 있다.

시장 영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규제

규제 기관과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 경제에 대한 시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첫째, 2011년 상생협력법에 따라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³⁸ 여기에는 빵집, 동전 세탁소, 방과 후 교실 등 생계와 관련된 서비스 중심의 업종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대기업의 신규 매장 오픈이나 지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3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2018년에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기업과 전통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 두부, 발효 장류, 제과 제조업, 그리고 서점 등 특정 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 인수, 확장이 최소 5년간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³⁹

이러한 제도는 경쟁을 유지하고 취약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 기업들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 업종 통합 및 확장은 권장되지 않는다.
- 비효율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정되지 않는다.

정부 지원 정책이 격차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단 696개 회사만이 중소기업 지위에서 벗어났다.⁴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중견기업(MME) 지위로 진출한 기업은 96개에 불과하고, 그 중 89개는 매출 감소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였다. 2014년 이후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단 5건뿐이다.⁴¹ 대다수는 여전히 규모가 작고, 분열되어 있으며,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정책 유발형 침체(policy-induced stagnation)’라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 기관과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 경제에 대한 시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달리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운영 목표, 정책 추진, 집행 관행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쟁 집행이라는 핵심 역할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한국의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주요 법률 중 하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간의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²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⁴³ 또한, 제 25 조는 공정위에 지급 지연, 강압 거래, 독점 정보의 부정 유용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직접 개입하여 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 중 일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되는데,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⁴

또한, 공정위가 특정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규제 프레임워크인 PCPA와 우월적 거래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사후 집행 도구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MRFTA)에 대한 PAB를 추진하는 것은 디지털 시장에서 제도적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소규모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⁴⁵ 절차적 설계는 다르지만, 두 제안 모두 자체 선호 금지, 끼워팔기 제한, 그리고 유럽 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매우 유사한 강화된 데이터 분리 조항 등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중복되는 실질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⁴⁶ 두 입법 경로의 일치는 한국이 공정위를 통해 경쟁법을 단순히 현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규제 내에 중소기업 보호를 구조적 원칙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 규제와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 접근 방식의 누적 효과는 한국을 디지털 경쟁 정책을 플랫폼 책임성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이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중심 정책 기조에 뿌리를 둔, 차별화된 주체 중심(actor-centric) 전략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집행 관행은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소규모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공정위는 쿠팡에 1,400 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자사 브랜드 상품을 제3자 판매자보다 우선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⁴⁷ 또한, 위원회는 YouTube 구독 서비스에 YouTube Music 을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외국계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국내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 속에 Google 을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위의 정책 이니셔티브(즉, 앞서 언급한 PCPA 또는 PAB 추진)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⁴⁸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는 달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 및 진흥을 운영 권한, 정책 이니셔티브, 집행 관행에 내재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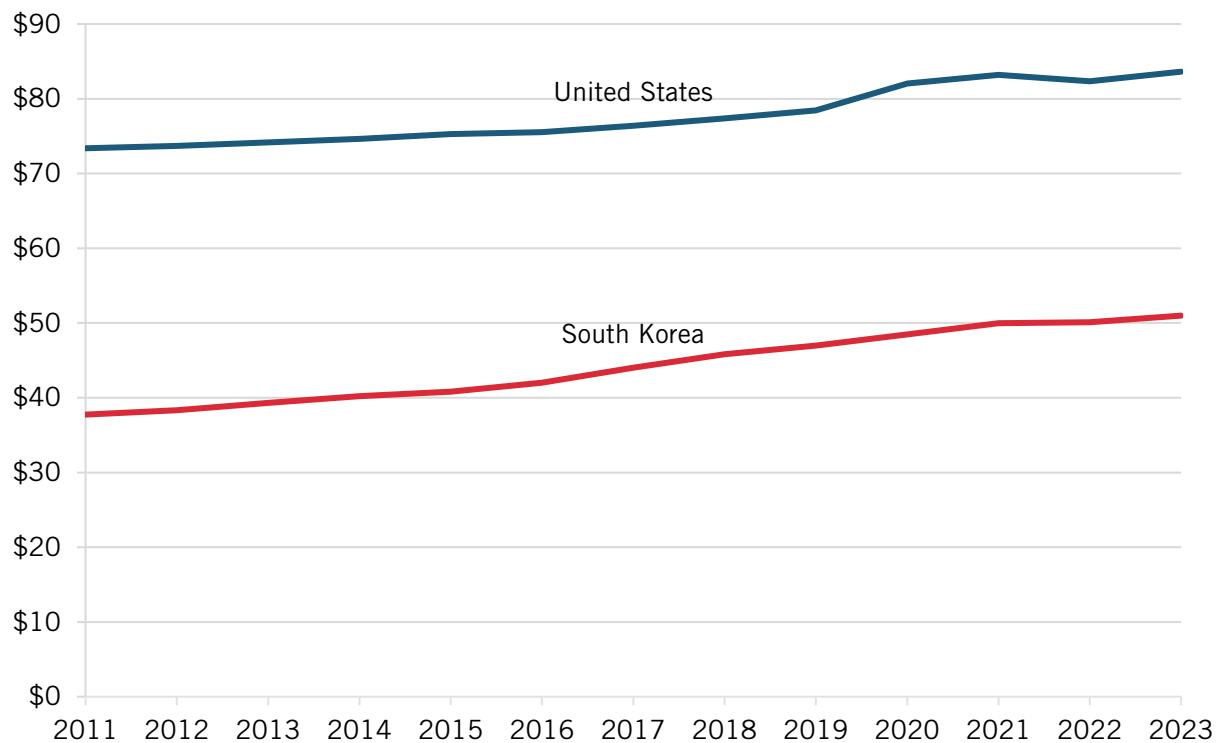
이러한 제도들은 본래 재벌(chaebo)의 시장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경쟁 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기업을 보호된 저수익 부문에 고정시키는 방식은 시장의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산업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낳는다. 더불어,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존재하면 경쟁이 강화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독점의 반대는 과도한 분산이나 시장 집중도가 1 인 구조가 아니다.⁴⁹

추가적인 제도적 특징이 이러한 역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종종 의도치 않게 자영업자들이 규모를 확장하거나 공식화하기보다는 낮은 생산성의 생계형 사업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은 많은 창업자가 성장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의 기업 규모 기준 적용⁵⁰
- 5 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에서 제외되는 노동법 상의 기준선⁵¹
- 연매출 1 억 400 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하는 간이과세제도⁵²
- 고성장 잠재력 산업보다는 전통적 저수익 서비스업에 집중된 공공 직업훈련 프로그램⁵³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행동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중소기업 비효율성은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생태계에 속한 대기업의 생산성도 포함된다. OECD 기준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대비 대부분 주요 산업에서 노동생산성(시간당 GDP, 구매력 기준)에서 20~30% 뒤쳐지고 있다. 이는 수출을 주도하는 중견 및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 18: 한국 대 미국의 노동 생산성 비교 (시간당 GDP, PPP, 2020년 가격)⁵⁴



간단히 말해, 한국의 생산성 문제는 혁신과 규모의 부족이 아니라 확산의 부족에 기인한다. 한국의 디지털 및 혁신 생태계는 위계적이며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은 R&D 파이프라인과 단절되어 있으며, 생계형 구조에 고착되어 있다.

소규모 기업이 많을수록 경쟁이 촉진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독점의 반대는 시장의 과도한 분열화나 시장 집중도가 1에 가까운 구조가 아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기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저부가가치 창업 구조와 첨단 서비스업 인재 부족의 유산

한국의 중소기업 확장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 중 하나는 산업 및 기업가 생태계의 근본적인 구성에서 기인한다. 창업의 비중이 소매, 음식, 숙박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생계형 자영업 수요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3%로, OECD 37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성장이나 혁신의 잠재력이 제한적인 자급자족형 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신설 법인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술 기반 산업에 속한 비중은 16.9%에 불과하였으며, 반면 83.1%는 기술 비기반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고부가가치,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분야에서 R&D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정규직 R&D 인력 중 단 26.7%만이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 분야에 고용되었다. 이는 29개 OECD 국가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가 지속 가능하고 성장 지향적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장기적 경쟁력이나 회복 탄력성 강화보다는 단기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 부족

데이터 집약적 기술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 규모는 사물 인터넷(IoT) 기술이나 클라우드 컴퓨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인이다. 통계청 통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기술 도입률은 기업 규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0 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24.5%가 최소한 하나의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반면, 중견 기업(직원 50~299 명)의 경우 이 비율이 12.1%에 불과하다.⁵⁶ AI의 경우 격차가 특히 두드러지며, 대기업의 도입률은 9.2%인 반면 중견기업의 도입률은 2.9%에 불과해 3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산업용 로봇 도입율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대기업 4.7%,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핵심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6.3%, 빅데이터 분석 5.3%, AI 4.0% 수준이다.

대부분의 한국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 부문은 여전히 노동 집약적이고, 디지털화가 부족하며, 비공식 경제 비중이 높다.⁵⁷ 전체 노동력의 20% 이상이 자영업자이며, 대부분은 저부가가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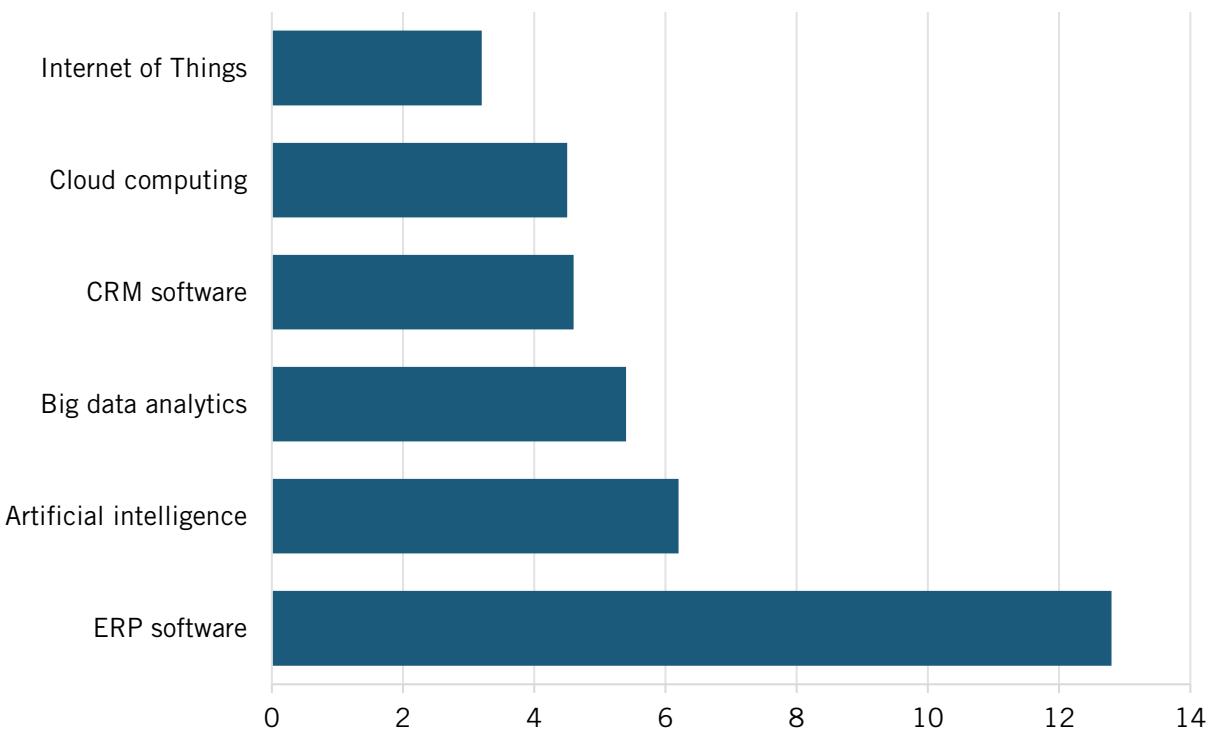
특히 AI 분야에서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대기업의 AI 도입률이 9.2%인 반면 중견기업의 도입률은 2.9%에 불과해 3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2022년 기준,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23.5%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6.28%), 캐나다(7.24%), 독일(8.75%), 일본(9.6%)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 시장의 경직성, 취약한 재취업 경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미비 등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은 최후의 생계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국가 생산성, 경제적 효율성, 장기적 회복력을 심각하게 해손한다.⁵⁸

대기업의 55%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도입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AI, 머신러닝,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조차도 중소기업에서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 역량 역시 OECD 회원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이러한 국내적 패턴은 OECD가 보고한 국제적 비교와 대체로 일치하며, 이는 선진국 전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신기술 도입률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림 19: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평균 확률비, 2013-2023⁵⁹



참고: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고급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집약적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3-7 배 더 높다. 이 비율은 OECD 자료를 기반으로, 직원 수 250 명 이상 기업과 10-49 명 기업 간의 비교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23.5%**를 차지하며, 이는 미국(**6.28%**), 캐나다(**7.24%**), 독일(**8.75%**), 일본(**9.6%**)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구조는 생산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igure 19에서 나타나듯,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더 큰 조직 규모, 기술적 역량, 그리고 보완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OECD 평균과 일치하지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진다. 반대로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 격차는 비교적 좁은데, 이는 진입 장벽이 낮고 기업 규모 전반에 걸쳐 적용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지연은 단순히 인프라나 기술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 인력에 대한 접근 제한, 미비한 지원 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솔루션 생태계의 과편화 등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해 있다.⁶⁰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은 거의 보편화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자문, 통합, 확장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 경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성장 모델은 대규모 제조, 빠른 기술 채택, 그리고 수출 중심의 글로벌 시장 통합에 기반해 왔다. 이른바 ‘페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은 개방된 시장과 안정된 세계화 시대에 매우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무역과 기술 환경은 현재 두 가지 구조적 힘 즉, 중국의 기술 리더십 부상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기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

“그 모델은 효과가 있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미국의 전략적 후퇴: 정책으로 자리 잡은 보호무역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상거래 질서의 구조적 재편을 의미한다. 관세, 리쇼어링(Reshoring),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반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안과 같은 핵심 정책들은 미국 산업정책의 장기적인 후퇴 기조를 반영한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이제 미국의 상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⁶¹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부품 등 특정 수출 품목에 의존하는 한국은 정치화된 공급망 속에서 시장 배제의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자립 전략: 디커플링이 아닌 디스인터미디에이션

베이징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을 강화하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용 기계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즉, 한국 및 외국 공급자를 자국산 대체재로 조직적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국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주요 제품들을 자국산으로 생산해 수출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70% 자급 목표, 배터리 소재 시장 지배력,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희토류 공급망 전략 등은 이미 지역의 무역 지형을 바꾸고 있다.

국내 병목 현상: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성장 엔진

이러한 글로벌 충격 이전부터 한국의 성장 엔진은 국내에서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이 주도하는 세계적 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 및 서비스업의 침체라는 이중 속도 경제가 지속되고 있음
- OECD 국가 중 중소기업 출업률이 가장 낮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생존 중심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은 미미함
- 전체 고용의 81%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3.9%에 불과하여 OECD 최저 수준임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수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첨단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제 ‘페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페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전환이라는 어려우나 필수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규모 기반의 수출 중심 성장에서 광범위한 생산성 중심의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세대 경제를 위한 핵심 전략

규모의 중립성을 수용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

한국의 경제 생태계는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에 치우쳐 있다. 이는 그들이 더 생산적이거나 혁신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작게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소기업이 포용적 성장의 주축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설계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시장 분절을 보조하고, 경쟁을 왜곡하며,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불이익으로 만드는 체계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아닌 회사 규모가 시장 지위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수십 년간 존속하면서도 구조조정이나 현대화, 퇴출 압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중견 혁신기업들은 정체를 보상하는 정책들로 인해 도태되고 있다.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은 규모에 따른 중립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저성과 기업의 생존을 전제로 한 기준 제도와 인센티브 구조를 개혁하고, 성장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동적이고 생산성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은 시장의 힘으로부터 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삼는 기관들에 기반한 현행 시스템을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현상 유지를 보상하는 구조가 아닌 성장을 보상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은 규모에 따른 중립을 채택해야 한다. 즉, 저성과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쟁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고 사항:

1. 기준 제도의 폐지 또는 개혁

- 국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KCCP)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적 사고방식을 상징하며, 효율성이나 소비자 혜택과 관계없이 대기업이 음식업, 출판, 세탁업과 같은 “보호”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 이러한 규제는 비효율성을 고착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제한하며, 인재와 자본을 저생산성 부문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KCCP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밝히고 있다.⁶² 그렇다면 좀비 기업을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 조치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구제 성격의 제도를 철폐하고, 경쟁력과 혁신 기반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 국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시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의무를 없애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새로운 헌장을 마련해야 한다. 대신,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행태 중심의 경쟁법 체계를 도입하여, 반경쟁적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PCPA** 및 **PAB**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새로운 사전 규제 체계로 도입하기에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 실질적인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지속적인 배제 행위나 혁신 억제 현상이 기존 법체계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광범위한 구조적 규제를 보류하고 대신 현행 경쟁법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MRFTA)의 사후 규제 도구로 제안된 PAB는 사실상 유럽연합의 DMA(Digital Markets Act) 방식의 규제를 한국의 기준 경쟁법에 이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혼합적 접근 방식은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의 과도한 적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기준 법률이 공정위에 진정한 반경쟁 행위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기준 제도의 범위 내에서 근거 기반의 정밀한 개혁을 우선해야 한다.

보조금, 대출, 공공조달 우대와 같은 정책 수단은 '졸업(graduation)'이라는 목표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생산성 기준과 기업 단위의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 새로운 행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MSS**)를 '기업 성장부'로 재편해야 한다. 개편된 부처는 보호에서 발전으로, 즉 소규모 기업을 유지하는 것에서 규모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임무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플랫폼 통합,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 수단 즉, 보조금, 신용, 조달 우대는 명확한 생산성 한계와 기업 수준 목표와 함께 "졸업"이라는 사명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 규모에 따른 세제 왜곡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법인세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10~20%의 차등 세율은 기업이 연 매출 100 억 원 또는 직원 수 5 명 이상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유인을 조장하고 있다. 통합형 세제 체계는 성장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지원을 생산성 향상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 프로그램은 일괄적인 보조금보다는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에 따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지원은 ERP 도입, 디지털 전환, 인력 역량 강화와 같은 측정 가능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전제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보조금은 산출 지표에 연계된 경쟁적 보조금이나 우대 대출로 전환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제도 설계 및 도입

- '졸업 가속 펀드(**Graduation Accelerator Fund**)' 신설 정부는 음식 서비스, 학원, 개인 서비스와 같이 과도하게 분산된 서비스 산업에서 통합, 인수합병(M&A), 플랫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 펀드를 신설해야 한다. 이러한 부문은 종종 중소기업 친화적인 규제로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생존 가능한 기업이 초소기업 지위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과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 영세사업체 퇴출 및 재배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노동력의 잘못된 배치를 줄이고 인력 매칭을 개선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질서 있는 퇴출을 촉진하는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출 지원은 맞춤형 재교육 보조금 및 재배치 대상 근로자의 제조업 및 기술집약 산업 내 생산성 높은 고용처 연결을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중소기업 및 서비스 부문 정책은 반사적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의 다음 성장 단계는 경쟁 촉진, 생산성 확산, 결과 중심의 성공 기반 마련에 달려 있으며, 이는 조직 형태가 아닌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

전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디지털 격차 해소

한국 근로자의 70%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지만, 이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매, 물류, 건설, 농업, 전통 시장 등은 디지털화가 제한적이고 자동화,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도구의 도입률이 낮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I 기반 물류, 스마트 농업, 건설 분야의 ERP 기반 운영 등 맞춤형 디지털 도구를 통해 뒤쳐진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기관 간 부문별 전략을 긴급히 개발해야 한다.
-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기술 도입을 가속화한다. 생계 및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은 규제 보호에서 벗어나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 건설, 물류, 소매 등 기존 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교육, 자문 서비스를 결합한 타깃형 디지털 도입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지속적인 지원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ERP 설치, AI 도입, 데이터 분석 통합, 핵심 자재 관리, 자동화, 향후 5년 내 근로자당 측정 가능한 부가가치 증가 등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ERP, AI, 로보틱스**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규모와 업종 무관)을 대상으로 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국 생산성 대시보드를 구축해 산업별 성과와 디지털 도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생산성 중심의 노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시간 기반에서 성과 기반 노동 지표로 전환하고, 부문별 생산성 벤치마크를 개발하며, 공공 부문의 평가 및 조달 기준도 산출물 중심으로 재정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 유인을 ‘근무 시간’에서 ‘근로자당 부가가치’로 전환할 수 있다.
- 혁신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현대화가 필요하다. 산업별 산출물과 디지털 전환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국가 생산성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의 협약 중심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실험이

가능하나, 한국의 현행 체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지연시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산업에서 '퍼스트 무버'의 이점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규제의 과편화를 줄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권한 있는 법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국의 다음 생산성 도약은 연구실이나 반도체 공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성 향상은 대다수 국민이 일하고 있는 경제의 기초층에 현대적 도구를 보급하는 데 달려 있다.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확산, 부문별 현대화, 산출 기반 노동 인센티브를 우선시하는 생산성 계획이 필수적이다.

혁신경제를 위한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현대화

혁신 주도형 경제에는 유연한 이동성, 재교육, 성장을 가능케 하는 노동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력 전환, 평생 학습, 글로벌 인재 유치를 지원하도록 노동 및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편해야 한다.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확산, 부문별 현대화, 산출 기반 노동 인센티브를 우선시하는 생산성 계획이 필수적이다.

추가 권고 사항:

- 대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 고용 보호에서 양질의 고용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간 통합 및 플랫폼 연계를 경제 정책뿐 아니라 노동 정책 차원에서도 장려한다. 안정적인 임금, 복리후생, 승진 기회를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 퇴직에서 재고용까지'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히 저생산성 중소기업에서 이직하거나 산업을 전환하는 근로자를 위한 상시적인 노동 전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간 한정 기본 소득, 재교육 수당, 성장 부문과 연계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연결된 지역 재고용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신기술 및 친환경 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 프레임워크를 설계한다. 경직된 고용 규정을 균형 잡힌 유연성으로 대체해야 한다. 해고수당, 보험, 휴가 등의 핵심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 계약 및 근무시간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 돌봄 제공자, 경력 전환자, 고령 근로자의 단계적 재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되지 못하는 노동력을 생산역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 대학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전환한다. 고등교육을 역동적인 모듈식 생태계로 재정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적층형 자격 과정, 파트타임·야간 과정, 산업 수요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장려한다. 재정 지원은 단순한 등록자 수가 아니라 취업 성과와 역량 향상 결과에 연계되어야 한다. 대학을 평생 인력 개발을 위한 중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다.
- 글로벌 인재 이동성 패키지를 도입한다. 미국의 이민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학생 비자 제도를 모델로 한 '한·미 기술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해, 엔지니어·연구자·기업가가 국경을 넘나들며 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주택

지원, 언어 교육,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비자 패키지로 보완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력 경직성에서 이동성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그리고 교육에서 평생 역량 강화로의 의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역동적인 혁신 경제는 역동적인 노동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결론: 생산성 중심 성장 모델로의 전환

한국의 다음 경제 변혁은 수출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정학적 분열, 기술적 혼란, 기술 경제의 거물로 떠오른 중국의 부상, 인구 감소라는 상황에 직면한 한국은 규모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모델에서 광범위하고 성과 중심의 혁신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트럼프와 중국 2.0 시대는 단순한 정책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 전반에 대한 시험대이다. 회복력은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넘어 얼마나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기업 규모 중립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확장성이 있는 기업을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및 생산성 도구의 국내 확산을 통해, 저성과 부문과 경제의 기초층 근로자에게까지 혁신이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적자본 강화와 노동 유연성 확대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고 이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와 중국 2.0 시대는 단순한 정책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구조 전반에 대한 시험대이다. 회복력은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넘어 얼마나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분열된 글로벌 질서 속에서 선도하려면, 한국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생산성으로, 개별 산업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우수성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 있는 개혁과 보호가 아닌 확산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보고서의 저자들은 ITIF 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조교인 Meghan Osterberg 와 Schumpeter 경쟁 정책 프로젝트의 선임 정책 분석가인 Lilla Nóra Kiss 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편집을 지원해 주신 Randolph Court 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오류나 누락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입니다.

저자 소개

Dr. Robert D. Atkinson(@RobAtkinsonITIF)은 ITIF 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Technology Fears and Scapegoats: 40 Myths About Privacy, Jobs, AI and Today's Innovation Economy* (Palgrave McMillian, 2024), *Big Is Beautiful: Debunking the Myth of Small Business* (MIT, 2018), *Innovation Economics: The Race for Global Advantage* (Yale, 2012), *Supply-Side Follies: Why Conservative Economics Fails, Liberal Economics Falters, and Innovation Economics Is the Answer* (Rowman Littlefield, 2007), *The Past and Future of America's Economy: Long Waves of Innovation That Power Cycles of Growth* (Edward Elgar, 2005)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세진은 ITIF 산하 한국혁신경쟁력센터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반도체 분야를 담당하는 기술 정책 분석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기술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과 정책 역학에 대한 문화 간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요 저서로는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2020년 12월, listed in Reuters Refinitiv), “WeMix, Web3 Gaming and Ethics” (2023년 1월), “2025 Global Tech Trends: 17 of The Trend Revolution is Coming” (2024년 11월) 등이 있습니다.

ITIF 소개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은 미국 워싱턴 DC 에 본부를 둔 독립적인 501(c)(3) 비영리·초당적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싱크탱크로 여러 차례 인정받았습니다. ITIF 의 사명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 성장, 기회 창출, 사회적 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해법을 도출하고 평가하며 확산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tif.org/abou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혁신경쟁력강화센터 소개

워싱턴 DC 에 위치한 ITIF 산하 기관인 한국혁신경쟁력센터(Center for Korean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는 한국이 다음 경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신기술 산업, 산업의 스케일업, 노동시장 개혁을 토대로 한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 산업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itif.org/centers/kor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주

1. 중소기업벤처부(MSS), '21년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771 만 개, 전체 기업의 99.9%', 2023년 8월 24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43937&parentSeq=1043937>.
2. 한국생산성본부(KPC), "생산성 통계 DB." Labor Productivity per Employed Person (PPP Adjusted, US\$), <https://stat.kpc.or.kr/integration/index>.
3. 고영선(2022),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No. 132)Korea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di.re.kr/kdipreview/doc.html?fn=18232_47991&rs=/kdidata/preview/pub.
4. 중소기업벤처부(MSS),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 2024년 08월 29일,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2875&parentSeq=1052875>; 중소기업벤처부(MSS),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25년 3월 11일, https://mss.go.kr/site/smba/foffice/ex/linkage/linkageView.do?target=R001&cont_knd=R001&b_idx=1583.
5. 통계청(KOSTAT),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2022년 6월 28일,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7dfb11df2cd7fc1a34c84bf71679f1a2a6d364e7df31cfc19b6c1ab15627fb5&rs=/synap/preview/board/10920>.
6.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ISIC Rev. 4) (databas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4_c243e16a-en/full-report/red-light-green-light-reforms-to-boost-productivity_1e59e1af.html#section-d1e4824-b308ebcf91.
7. 한국생산성본부(KPC), "생산성 통계 DB." <https://stat.kpc.or.kr/integration/index>.
8. 한국생산성본부(KPC), "생산성 통계 DB." <https://stat.kpc.or.kr/integration/index>.
9. 한국은행(BoK) '경제활동별 GDP 통계',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통계';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아슈와논점 제 2321 호, 2025년 2월 5일,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771>.
10. Ibid.
11. Ibid.
12. OECD, Productivity by Industry, Agriculture, gross value added per person employed,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value-added-by-activity.html>.
13. OECD, Productivity by industry: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accessed April 10,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nstruction%20productivity&pg=0&hc\[Topic\]=&hc\[Economic%20activity\]=&snb=1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ISIC4_I4&df\[ag\]=OECD.SDD.TPS&df\[vz\]=1.0&dq=JPN%2BKOR%2BPOL%2BGBR%2BDEU%2BCAN%2BAUS.A.GVAEMP.K.IX....&pd=2012%2C2023&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nstruction%20productivity&pg=0&hc[Topic]=&hc[Economic%20activity]=&snb=1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ISIC4_I4&df[ag]=OECD.SDD.TPS&df[vz]=1.0&dq=JPN%2BKOR%2BPOL%2BGBR%2BDEU%2BCAN%2BAUS.A.GVAEMP.K.IX....&pd=2012%2C2023&to[TIME_PERIOD]=false).
14. CT services are represent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KISC Code J), consistent with OECD and Statistics Korea classifications of the ICT service sector.
15. Korean Productivity Center(KPC), "생산성 통계 DB." <https://stat.kpc.or.kr/integration/index>.
16. OECD, Productivity by industry: services of the business economy excluding real estate; accessed April 10,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nstruction%20productivity&pg=0&hc\[Topic\]=&hc\[Economic%20activity\]=&snb=1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ISIC4_I4&df\[ag\]=OECD.SDD.TPS&df\[vz\]=1.0&dq=JPN%2BKOR%2BPOL%2BGBR%2BDEU%2BCAN%2BAUS.A.GVAEMP.K.IX....&pd=2012%2C2023&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tm=construction%20productivity&pg=0&hc[Topic]=&hc[Economic%20activity]=&snb=1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ISIC4_I4&df[ag]=OECD.SDD.TPS&df[vz]=1.0&dq=JPN%2BKOR%2BPOL%2BGBR%2BDEU%2BCAN%2BAUS.A.GVAEMP.K.IX....&pd=2012%2C2023&to[TIME_PERIOD]=false)

- explorer.oecd.org/vis?tm=construction%20productivity&pg=0&hc[Topic]=&hc[Economic%20activity]&snb=199&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ISIC4_I4&df[ag]=OECD.SDD.TPS&df[vs]=1.0&dq=JPN%2BKOR%2BPOL%2BGBR%2BDEU%2BCAN%2BAUS.A.GVAEMP.GTNXL.IX....&pd=2012%2C2023&to[TIME_PERIOD]=false.
17. 통계청(Statistics Korea), 2025년 3월 고용동향,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9304d2a7393b4f3b3a49fdf6d103a974cad30953a1c3fe97e08a3c298c26c0b0&rs=/synap/preview/board/210/>.
 18. OECD, OECD Data Archive, Multifactor Productivity, annual; accessed April 11,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av=true&pd=%2C2022&dq=USA%2BKOR%2BOECD%2BOAVG.MFP...A&to\[TIME_PERIOD\]=false&vw=tb](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D&df[v]=&av=true&pd=%2C2022&dq=USA%2BKOR%2BOECD%2BOAVG.MFP...A&to[TIME_PERIOD]=false&vw=tb)
 19.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July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7/oecd-economic-surveys-korea-2024_9343c046/c243e16a-en.pdf.
 20. Chalaux, T. and Y. Guillemette (2019), "The OECD potential output estimation methodolog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357c723-en>.
 21.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kor-2018-en.
 22.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dde9480-en>.
 23. 고영선(2022),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KDI Focus No. 132)Korea Development Institute. https://www.kdi.re.kr/kdipreview/doc.html?fn=18232_47991&rs=/kdidata/preview/pub.
 24. Robert D. Atkinson and Michael Lind, *Big is Beautiful: Debunking the Myth of Small Business* (Cambridge, MA: MIT Press, 2018).
 25. 고용노동부(MOEL),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44페이지, <https://www.xn--vb0b6f546cmmsg6pn.com/sub/reference/reference01.asp?mode=view&bid=1&idx=1155>.
 26.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실태조사」, 2022, 2025.04.28, 육아휴직제도-사용가능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k=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2FstatHtml.do%3Fconn_path%3D12%26tblId%3DDT_118045_A015%26orgId%3D118%26.
 27. OECD, Pensions at a glance; accessed April 10,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vis?tm=pensions&pg=0&hc\[Unit%20of%20measure\]=&snb=174&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AG%40DF_PAG&df\[ag\]=OECD.ELS.SPD&df\[vs\]=1.0&dq=.A.CRPLF22%2BFRPLF22%2BGPRR100%2BATRW%2BATRAEP%2BATRPPAE%2BNPWR100%2BGPW100%2BNPW100%2BFR%2BLE%2BER%2BAOWAR%2BELMEA%2BEYLME%2BEDIOP%2BPTOP%2BOCOP%2BCIOP%2BEIOP%2BAWG%2BOAIP%2BPEP%2BPPEP....&pd=2019%2C2022&to\[TIME_PERIOD\]=true](https://data-explorer.oecd.org/vis?tm=pensions&pg=0&hc[Unit%20of%20measure]=&snb=174&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AG%40DF_PAG&df[ag]=OECD.ELS.SPD&df[vs]=1.0&dq=.A.CRPLF22%2BFRPLF22%2BGPRR100%2BATRW%2BATRAEP%2BATRPPAE%2BNPWR100%2BGPW100%2BNPW100%2BFR%2BLE%2BER%2BAOWAR%2BELMEA%2BEYLME%2BEDIOP%2BPTOP%2BOCOP%2BCIOP%2BEIOP%2BAWG%2BOAIP%2BPEP%2BPPEP....&pd=2019%2C2022&to[TIME_PERIOD]=true).
 28.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0cad36-en>.
 29. OECD (2024), Survey of Adults Skills 2023: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urvey-of-adults-skills-2023-country-notes_ab4f6b8c-en/korea-republic-of_5f95963c-en.html.
 30. Republic of Korea. (1987).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3, Clause 3,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lCisCd=L&lslNm=%EB%8C%80%ED%95%9C%EB%BC%>

EA%B5%AD%ED%97%8C%EB%B2%95&IsId=prec20080109&joNo=012300&efYd=20080109&mode=11&lnkJoNo=undefined.

31.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and Research Institute, for the Assessmen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n-Depth Study on Fiscal, Programs 2010: the SME Sector, Seoul (2011) (in Korean); Robert Atkinson, "The Real Korean Innovation Challenge: Services and Small Businesses," Korea's Economy 2014 (Vol. 30, pp. 47–54),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https://keia.org/publication/the-real-korean-innovation-challenge-services-and-small-businesses/>.
32.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July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7/oecd-economic-surveys-korea-2024_9343c046/c243e16a-en.pdf.
33. Bank of Korea. (n.d.), SME mandatory lending system,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160&cid=42103&categoryId=42103>.
34.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July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7/oecd-economic-surveys-korea-2024_9343c046/c243e16a-en.pdf;
 1.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6.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8. Ministry of Environment.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0.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1.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2.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13.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4. Forest Service. 15. Public Procurement Service. 16.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7. Communications Commission. 18. Customs Service.
35. Ibid.
36.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Paris: OECD, July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4/07/oecd-economic-surveys-korea-2024_9343c046/c243e16a-en.pdf.
37. Ibid.
38. KDI 경제정보센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본격 시행, <붙임> 시행령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비교,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3386&topic=>.
39. 동반성장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현황, 검색일: 2025년 4월 17일,
https://www.winwingrowth.or.kr/site/cntnts/CNTNTS_030.do.
40. OECD,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 2023, <https://www.oecd.org/industry/smes/outlook/>;
Atkinson, "The Real Korean Innovation Challenge: Services and Small Businesses."
41. Minseo Kim, Seongbae Lim, and Yeong-wha Sawng, "A Study on Growth Engines of Middle Market Enterprise (MME) of Korea Using Meta-Analysis" Sustainability 14, no. 3, 2022, 1469,
<https://doi.org/10.3390/su14031469>.
42. The purpos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contracting Act") is to prevent prime contractors (mainly, large enterprises) from abusing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he course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protecting interests of subcontractors that are in a financially weaker position (mainl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ultimately establish a fair order in subcontracting transactions. Fair Trade Commission, "Subcontract Policy," <https://www.ftc.go.kr/eng/contents.do?key=550>.
43. Ibid.

44.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KLRI, 2024),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https://elaw.klri.re.kr/eng_mobile/viewer.do?hseq=64589&type=part&key=28.
45. Lilla Nóra Kiss, "Why South Korea Should Resist New Digital Platform Laws" (ITIF December 9, 2024), <https://itif.org/publications/2024/12/09/why-south-korea-should-resist-new-digital-platform-law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artial amendment, Act No. 11406, March 21, 2012), 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b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25318&lang=ENG; Joseph V. Coniglio et al., "A Policymaker's Guide to Digital Antitrust Regulation," (ITIF, March 31, 2025),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3/31/policymakers-guide-digital-antitrust-regulation/>.
46. Regulation (EU) 2022/19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22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and amending Directives (EU) 2019/1937 and (EU) 2020/1828 (Digital Markets Act), Official Journal (OJ), L 265/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22R1925&qid=1698952729244>.
47.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wd=%EC%BF%A0%ED%8C%A1&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3448>.
48.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 2024년 9월 9일, https://www.ftc.go.kr/viewer/synap/skin/doc.html?fn=2024090906264410797_000001.hwp&rs=/viewer/synap/preview/;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소비자, 배달플랫폼 간 상생방안 도출 적극 지원”, 2024년 10월 8일,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searchCnd=all&searchKwd=%ED%94%8C%EB%9E%AB%ED%8F%BC&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3613>.
49. 중소기업연구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2018, <https://db.kos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02K01&issueID=333b87901ea64174998dca7833674a88>.
50.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세제혜택 개요,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Id=PBLN_0000000000078224.
5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 20520 호, 2024. 10.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11%EC%A1%BO>.
52.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https://www.nts.go.kr/nts/cm/cnnts/cnntsView.do?cnntsId=7693&mi=2272>.
53. 한겨레, “중소기업 매출 기준 1500→1800 억...혁신 유도 대신 ‘피터팬’ 키울라”, 2025년 5월 1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95396.html.
54. OECD Data Archive, Indicator: GDP per hour worked, Subject: Total, Measure: US dollars, Frequency: Annual, [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gdp%20per%20hour%20worked&pg=0&hc\[Measure\]=&hc\[Unit%20of%20measure\]=&snb=14&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LV&df\[ag\]=OECD.SDD.TPS&df\[vs\]=1.0&dq=KOR%2BDEU%2BAUS%2BUS%2BGBR%2BJPN%2BPOL.A.GDPHRS..USD_PPP_H.Q...&pd=2011%2C2023&to\[TIME_PERIOD\]=false](https://data-explorer.oecd.org/vis?lc=en&tm=gdp%20per%20hour%20worked&pg=0&hc[Measure]=&hc[Unit%20of%20measure]=&snb=14&vw=tb&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PDB%40DF_PDB_LV&df[ag]=OECD.SDD.TPS&df[vs]=1.0&dq=KOR%2BDEU%2BAUS%2BUS%2BGBR%2BJPN%2BPOL.A.GDPHRS..USD_PPP_H.Q...&pd=2011%2C2023&to[TIME_PERIOD]=false).

55.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2022년 5월 1일, https://m.fki.or.kr/bbs/bbs_view.asp?cate=news&content_id=09ba86e3-b375-485d-90ed-33282533efd7.
56. 통계청(KOSTAT), 「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봄호, 2024년 3월 25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6&list_no=430060&act=view&mainXm=Y.
57.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Authors' elaboration based on OECD (2023[5]) and Eurostat (2024[95]),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digital-economy-outlook-2024-volume-1_a1689dc5-en/full-report/component-7.html#sect-65.
58. KBR 경영연구소, [심층분석] 왜 한국만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을까? 세계 최고 수준 자영업 비율의 충격과 해법, 2025년 5월 2일,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6068&thread=24>.
59.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60.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2021),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for Digital-Based Growth, https://www.kdi.re.kr/eng/research/reportView?pub_no=17620.
61. See: Robert D. Atkinson and Stephen Ezell, "Toward Globalization 2.0: A New Trade Policy Framework for Advanced-Industry Leadership and National Power" (ITIF, March 2025), <https://itif.org/publications/2025/03/24/globalization2-a-new-trade-policy-framework/>.
62. 동반성장위원회(KCCP), "Who we are-Our Purpose", 검색일: 2025년 5월 4일, https://www.winwingrowth.or.kr/site/cntnts/CNTNTS_009.do.